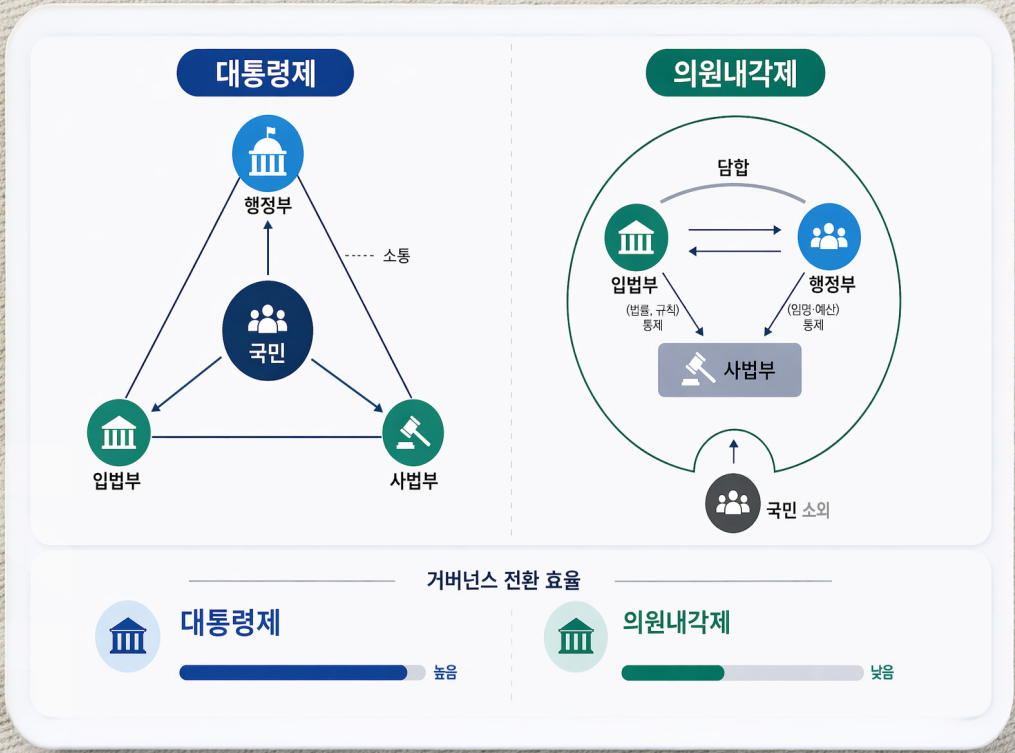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6-02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김 재 훈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정책연구시리즈 2026-02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김재훈

정책연구시리즈 2026-02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저 자

김재훈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지원

오주희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발간사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경제에 좋은가, 권위주의가 좋은가”라는 오래된 논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제도 설계를 택하느냐에 따라 경제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의식이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선거구가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제도적 선택들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국식 자유시장(워싱턴 컨센서스)과 중국식 국가 주도 성장(베이징 컨센서스)이라는 두 극단의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 내부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따진다.

문헌 검토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엇갈린 결론을 내놓고 있음을 확인한다. 민주주의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자를 늘려 성장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나 의사결정 지연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제는 강한 집행력과 장기 안정성이 장점이고, 내각제는 유연한 정책 조정과 합의 형성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결론은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오지 않았다. 이 연구는 단기 성장률 대신 장기 소득수준을 분석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이 혼란을 정리하려 한다. 제도의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이기 때문에, 연도별 성장률로는 그 흔적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는 분석을 위해 OECD 선진 38개국의 약 30년(1995~2023년)의 데이터를 모았다. 각국의 정부형태, 선거제도, 권력 구조를 분류하고, 여기에 행정 효율, 부패통제, 법 집행력, 규제품질, 정치 안정성과 같은 정부 운영 능력 지표를 결합했다. 핵심 질문은 "정부가 잘 운영될 때, 어떤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그 효과가 국민소득으로 가장 잘 이어지는가"이다. 식민지 역사, 무역 의존도, 고령화 같은 외부 요인들도 함께 통제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결과는 상당히 선명하게 나왔다. 대통령제에 소선거구제, 삼권분립을 갖춘 나라에서 정부 운영 능력이 개선될 때 국민소득 상승 효과가 가장 컸다. 예를 들어 행정 효율이 한 단계 좋아지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소득이 약 47~60% 높아지는 효과가 추정된 반면,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훨씬 약하거나 거의 없었다. 이유는 구조적으로 설명된다. 대통령은 고정된 임기 덕분에 의회 눈치를 덜 보고 장기적인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고,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직접 책임지는 정치인을 만들어내 정치를 안정시킨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의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좋은 행정 능력이 있어도 장기 개혁보다 단기 정치적 생존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 대한 함의는 직접적이다. 현행 단임 대통령제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개혁 동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하향식 공천 구조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보다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입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저자는 4년 중임제의 도입으로 대통령의 장기 시야를 확보하고, 상향식 공천으로 의원들의 독립성을 키우며, 분점정부를 갈등의 장이 아닌 협상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다만, 개혁 과정 자체에서 현

직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 자체는 선진 민주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체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 내부에서 제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로서의 가치는 분명하다.

본 보고서의 저자는 자료 정리 및 분석과 초고 편집을 도와준 오주희 연구원, 최종 편집을 도와준 이호형 연구원, 마지막으로 익명의 검토자께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26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세 직

목 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 3

제2장 관련 문헌 ····· 7

제1절 정부형태와 권력분할/융합 ····· 7

제2절 선거제도 ····· 10

제3절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 11

제3장 이론적 논의와 가설 ····· 14

제1절 이론적 논의 ····· 14

제2절 가설 설정 ····· 20

제4장 분석 방법 ····· 27

제1절 분석 모형 ····· 27

제2절 변수, 분석자료와 기술통계 ····· 30

1. 통제변수 ····· 30

2. 종속변수 ····· 32

3. 자료와 기술통계 ····· 35

제5장 실증분석 ····· 42

목차

제1절 정치체제와 장기 경제발전 수준 ····· 42
1. 공통 통제변수 및 동태적 구조 ····· 43
2.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조합별 분석 ····· 45
3. 정부형태 ····· 49
4. 선거제도 ····· 50
5. 권력분립/융합 ····· 51
제2절 정치제도와 정부역량 ····· 52
1. 정치제도가 정부역량 수준 자체에 미치는 영향 ····· 52
2. 정치제도와 장기 소득수준 ····· 57
제3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 58
1. 인과 기제의 체계적 분해 ····· 58
2. 이론적·정책적 함의 ····· 5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60
제1절 결과 요약 ····· 60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제도 설계 원칙 ····· 61
제3절연구의 한계 ····· 65

참고문헌 ····· 67
부 록 ····· 71
ABSTRACT ····· 91

◈ 표 목 차

<표 4-1> 정부형태 관련 변수(체제 더미) 설명 ····· 36
<표 4-2> 정부형태 관련 변수(체제 더미) 기술통계 ····· 37
<표 4-3> 정부역량 관련 변수 설명 ····· 38
<표 4-4> 정부역량 관련 변수 기술통계 ····· 39
<표 4-5> 종속변수 및 기타 독립변수·통제변수 설명 ····· 40
<표 4-6> 종속변수 및 기타 독립변수·통제변수 기술통계 ····· 41

<표 5-1>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분석 결과 ····· 46
<표 5-2> 정부형태 분석 결과 ····· 50
<표 5-3> 선거제도 분석 결과 ····· 51
<표 5-4> 권력분립 분석 결과 ····· 52
<표 5-5>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 53
<표 5-6>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 54
<표 5-7>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 54
<표 5-8>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 ····· 55
<표 5-9> 법치주의(Rule of Law) ····· 56
<표 5-10> 정치제도와 소득수준: Random Effects GLS ····· 57

<부표 1>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 71
<부표 2>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 72
<부표 3>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 73
<부표 4>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 74
<부표 5>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 75
<부표 6> 정부형태: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 76

표목차

<부표 7> 정부형태: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 77
<부표 8> 정부형태: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 78
<부표 9> 정부형태: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 79
<부표 10> 정부형태: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 80
<부표 11> 선거제도: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 81
<부표 12> 선거제도: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 82
<부표 13> 선거제도: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 83
<부표 14> 선거제도: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 84
<부표 15> 선거제도: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 85
<부표 16> 권력분립: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 86
<부표 17> 권력분립: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 87
<부표 18> 권력분립: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 88
<부표 19> 권력분립: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 89
<부표 20> 권력분립: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 90

요 약

이 보고서는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이분법적 비교에 치중한 데 비해, 이 연구는 OECD 고소득 민주 국가들의 미시적 제도 조합(정부형태, 선거규칙, 권력구조)이 정부역량을 통해 장기 경제 수준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양극단을 넘어, 민주적 제도 내에서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이 핵심 결정요인임을 강조한다.

문헌 고찰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검토한다. 일부 연구는 민주주의가 재산권 보호와 투자 유인을 강화해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연구는 정책 지연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제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집행력을, 의원내각제는 유연성과 합의를 장점으로 꼽지만, 실증 결과는 모호하다. 최근 Acemoglu *et al*.(2019)처럼 성장률 대신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민주주의의 긍정 효과가 확인되며, 이는 단기 변동성을 통제한 장기 누적 효과를 포착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분석 방법으로, OECD 38개국(1995~2023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Arellano-Bover/Blundell-Bond System GMM을 적용한다. 종속변수는 ln(GDP per capita)로 경제발전 수준을 측정하며, 정치체제 더미(대통령

제, 세미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삼권분립, 권력융합)와 정부역량 지표(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정치 안정성, 규제품질, 법치주의)의 교차항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통제변수로는 역사적 유산(스페인 식민지, 구소련 경험, 스칸디나비아 법적 기원), 경제 구조(무역 의존도, 인플레이션, FDI, 석유지대), 인구구조(고령화)를 포함해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다.

실증 결과,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 삼권분립 조합이 정부역량 개선 시 소득수준을 가장 크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 효과성 1단위 개선은 대통령제(ps)에서 47.1% 상승(실질 60.2%)을 보이지만, 의원내각제(cm)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 부패통제와 법치주의도 유사하며, 규제품질은 4~7% 상승 효과를 보인다. 정치 안정성은 대통령제에서 긍정적이지만, 의원내각제에서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대통령제의 고정 임기와 생존 분리가 장기 개혁 유인을 강화하고, 소선거구제의 상향식 공천이 정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책 함의로, 한국처럼 단임제와 하향식 공천의 취약성을 가진 대통령제는 개혁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의 도입으로 장기 시야를 확보하고, 중간선거로 분점정부를 협상 기회로 전환하며, 상향식 공천으로 입법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헌법 개정 시 현직 정치인 배제와 시민 참여를 강조해 대리인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제도 내 경제 안보를 완성하는 '제도적 삼위일체'로, 워싱턴-베이징 양극단 이후의 세계를 대비한 로드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고소득 민주 국가에 한정되어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체제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다. 또한 제도적 이질성이 낮아 체제 자체 효과의 식별이 제한되며, 권위주의 모델의 장점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 성과 및 법치와 부패통제 수준이 높은 제도적 환경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 효율을 최적화하는 실증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소련 붕괴(1991년) 이후 30여 년 동안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Williamson, 1990)는 시장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를 통해 점진적 개혁(gradualism)이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수렴시킬 것이라는 수렴 가설(convergence hypothesis)에 기반한 단선적 발전관을 주도했다. 점진적 개혁론자들(Dewatripont and Roland, 1992; Roland, 2002)은 중국의 WTO 가입(2001년)을 이 낙관론의 정점으로 간주했으며, 시장 메커니즘의 점진적 확산이 정치적 자유화와 평화적 번영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Ramo, 2004)를 실천하며, 국가 주도 혁신,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기술 자급자족, 하이브리드 전쟁(economic coercion, IP theft, supply-chain dominance, cyber intrusion)을 본격화했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수렴 가설을 근본적으로 붕괴시켰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 시스템 리스크를, COVID-19 팬데믹(2020~22년)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단일 의존성을 각각 드러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권위주의적 안정성(authoritarian stability)과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를 앞세워 경제안보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부 강압과 내부 억압에 의존한 취약한 균형이다(Halper, 2010). 이제 다음 위기가 도래할 때, 민주주의 국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를 넘어선 제3의 민주적 제도 경로(third democratic institutional pathway)를 찾아야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제도적 생존(institutional survival) 문제, 즉 "어떤 민주적 정치체제가 경제안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증적 인과분석(empirical causal analysis)을 수행한다.

정치체제는 정부형태(presidentialism, semi-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선거규칙(majoritarian v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권력구조(separation vs. fusion of powers), 공천제도(centralized vs. decentralized nomination)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집단행동의 조직원리(organizational principle of collective action)로서 정책 결정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책임성(accountability), 위기 대응 속도(crisis response velocity)를 규정한다. 한국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체제를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헌론이 제기된다. 그 근거는 사표 과다, 양당 분열 심화, 사회적 다양성의 정치적 소외, 대통령에 권력 집중으로 인한 협치 부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포용성에 치중한 규범적 논증에 머물며, 장기적 경제안보와의 인과적 연계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결여되어 있다.

경제안보는 경제성장,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면서도 이를 초월한다. 경제안보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s ― 공급망 단절, 자원 무기화, 금융 제재)과 내생적 취약성(endogenous vulnerabilities ― 부패, 정책 불연속성, 사회 분열)으로부터 경제체제를 방어하고, 회복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보장하는 동적 균형 상태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 개방만으로 경제안보가 자동 달성될 것이라 가정했고, 베이징 컨센서스는 국가 통제와 권위주의적 안정성으로 이를 대체했으나, 둘 다 민주적 제도하에서의 정부역량(state capacity)의 경제적 환산 효율(economic conversion efficiency)을 간과했다(Chen, 2017). 강력한 정부 효율성, 법치주의와 부패통제는 장기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안보 기반이다. 본 연구는 이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제도적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

인 경제안보 완성의 ‘설계 원칙’을 제시하며, 정치체제가 결정하는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이 경제안보의 핵심 결정요인(core determinant)임을 실증한다.

본 연구는 OECD 38개국(1991~2023년, 최대 1,048개 관측치)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체제의 미시적 조합이 정부역량(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정치적 안정성, 규제품질, 법치주의)을 통해 장기 경제발전 수준에 미치는 인과적 기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확률 효과 GLS로 정치체제의 직접 효과를, Arellano-Bover/Blundell-Bond System GMM으로 정치체제별 정부역량을 통한 조절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 전략(dual estimation strategy)을 채택한다. 높은 소득수준과 정부역량의 결합이 곧 외생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경제안보)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가 입증한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이 보이는 압도적인 소득 환산 효율성은, 이 제도 조합이 강력한 집행력(대통령제)과 정치적 책임성(소선거구제)을 결합하여 정부 효율성 및 부패통제와 같은 경제안보의 기초 체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함을 의미한다.

핵심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및 삼권분립 체제는 정부역량 1단위 개선 시 소득수준을 최대 47%p(정확히 $\exp(0.471)-1 \approx 60.2\%$ 실질 증가) 상승시키는 최고의 환산 효율(highest marginal returns)을 보인다.
2. 의원내각제 + 중대선거구제 체제는 거버넌스 개선이 경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제도적 함정(institutional trap)에 갇혀 있다.
3. 소선거구제는 단독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대통령제와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synergistic interaction)를 발휘한다.
4. 순수 대통령제는 정부역량 → 경제안보 전환의 핵심 동력이며, 권력융합은 효과가 미미하다.

이 결과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선 제3의 민주적 제도 설계를 요구한다. 시장 개방(Washington)도, 국가 통제(Beijing)도 아닌 민주적 제도 내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이 경제안보의 본질이다.

한국의 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도,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은 베이징 컨센서스식 다당제 연립정부(multi-party coalition instability)로의 퇴행 위험이 있으며, 장기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위험한 제도적 실험(risky institutional gamble)으로 평가된다. 반면,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 강화(삼권분립 심화)와 소선거구제의 보완적 개혁(예: 예비선거제 혹은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정부역량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외생적 충격 하에서도 내생적 회복력을 보장하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민주적 경로(empirically validated democratic pathway)이다.

본 연구는 정치체제가 경제안보의 제도적 기반임을 인과적으로 입증하며, 워싱턴-베이징 양극단 이후의 세계(post-Washington-Beijing world)를 대비한 민주적 제도 공학의 실증적 로드맵(evidence-based democratic institutional roadmap)을 제시한다.

제2장

관련 문헌

제1절 정부형태와 권력분할/융합

정부형태는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된다. Lijphart(2012)는 이 두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행정부의 입법부 신임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존속하며, 불신임 투표를 통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어 권력의 유연한 재배분이 가능하다. 반대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아 의회의 개입 없이 안정적으로 재임하며, 탄핵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강제 퇴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대통령제가 권력분할(separation of powers)을 강조하는 반면,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fusion of powers)을 특징으로 한다. 대통령제의 권력분할은 별개의 기원(separate origin)—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직접 선거로, 의회는 지역구별 선거로 선출됨—과 별개의 존속(separate survival)—각각 고정 임기를 가짐—을 통해 구현되며, 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촉진한다.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입법부 내에서 형성되고 그 신임에 의존하므로 권력이 통합되어 운영된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부형태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은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반대 관점에서는 대통령제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Linz(1990)는 대통령제의 장점으로 강력한 지도력, 정책 안정성,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꼽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고정 임기 동안 정당이나 의회의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의회는 대통령의 정책을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의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제 메커니즘은 의원내각제의 권력융합이 초래할 수 있는 다수당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보호한다고 보는 반대 관점이 있다. 그러나 Linz(1990)는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한국의 여소야대 상황처럼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발생하면 정책 갈등으로 입법 마비(gridlock)가 일어나 국력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대통령제 옹호자들은 분점정부가 오히려 과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야당의 견제를 통해 더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분점정부 기간에도 주요 개혁(예: 클린턴 시대 복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권력분할이 협치를 촉진한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반면,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정치적 책임성과 효율성에 있다. Lijphart (2012)는 의원내각제가 행정부의 의회 책임을 강조하며, 내각이 신뢰를 잃으면 불신임 결의로 교체 가능하고, 총리가 이에 대응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Bagehot(1867)은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수당을 공유하므로 정책 갈등이 적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내각과 의회가 정보를 공개할 때에만 성립하며, 실제로는 담합(collusion)을 통해 정보를 은폐하고 권력을 사유화할 유인이 크다고 비판받는다. 반대 관점에서는 의원내각제가 빈번한 내각 교체로 정치 불안정을 초래하며, 특히 다당제 환경에서 연립정부가 불안정해 장기 정책 실행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Linz(1990)는 의원내각제가 연합 구성으로 내각이 빈번히 교체되어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Mill(1861)은 권력융합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다수당의 독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은 유럽 일부 국가(예: 이탈리아)의 잦은 정부 붕괴를 예로 들어 의원내각제가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이 두 제도의 중간 형태인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ism)는 대통령(직선제, 고정 임기)과 총리/내각(의회 신임)의 공존으로 위기 시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회의 책임성을 결합하려 한다. 그러나 동거정부(cohabitation)처럼 분점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제의 단점을 답습할 수 있으며, 반대 관점에서는 이 제도가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더 유연한 거버넌스를 제공한다고 본다. Lijphart(2012)는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민주주의 안정성과 생존에 유리하며, 분열된 사회에서는 합의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를 위한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선거제도, 양원제, 사법부 역할 등의 보완적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 관점에서는 대통령제가 국민 직접 선출로 더 강한 정당성을 부여받아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논의에서 Montesquieu(1989, 원전 1748)는 권력분할을 국민 자유의 보장으로 보아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와 상호 견제를 주장하며, 권력 집중이 폭정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Madison(1788, Federalist No. 51)은 인간의 이기심을 고려해 야망을 야망으로 견제하는 체크와 밸런스 시스템을 제안하며, 권력분립이 절대적 분리가 아닌 부분적 침투를 통해 상호 거부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연구들은 분점정부의 문제를 재평가한다. Mayhew(1991)는 미국에서 분점정부와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간에 주요 법안 통과와 의회 조사 활동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 의회의 분권화로 인해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Fiorina(1996)는 유권자들이 의도적으로 분점정부를 선택해 견제를 강화하며, 이는 타협을 촉진하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Cameron(2000)은 분점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야당 정책을 조정하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분점정부의 교착 위험을 과장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의원내각제 비판자들은 연립정부의 불안정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국민의 완전한 정보 접근을 전제로 하며, 불완전 정보 시 위임의 위임 구조로 담합 부패가 발생하고 책임이 불분명해진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책임으로 담합을 억제하나, 한국의 공천제도처럼 제도적 맥락이 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제2절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정치체제의 형성과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Cox(1997)의 *Making Votes Count*는 이를 합리적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권자는 단순 선호(sincere voting)가 아닌 투표 결과의 영향력을 고려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 대신 차선 후보에 투표하며 표의 낭비를 피한다. 이는 개인적·집합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선거제도의 투표 방식과 당선 기준이 이를 유도한다.

단순 다수대표제(single-member plurality system)에서는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양당 체제를 유도하는데, 이는 Duverger's Law로 알려져 있다. Duverger's Law는 단순 다수제에서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소수 정당을 배제하고 두 주요 정당의 경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수학적 및 게임이론적 증명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Palfrey (1989)는 선거를 게임이론 모델로 분석하여, 단순 다수제에서 세 후보가 경쟁할 때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이 약한 후보의 지지를 약화시켜 양당 균형을 이루는 Nash 균형을 증명한다. 이 모델은 유권자가 후보의 승리 확률을 예상하고 투표를 조정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며, 약한 후보에 대한 투표가 '낭비'로 인식되어 강한 두 후보로 집중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또한 Fey(2007)는 전략적 투표 없이도 정책 지향적 후보들의 출마 결정이 Duverger's Law를 유도할 수 있음을 게임이론으로 증명하며, 후보들이 출마 여부를 고려할 때 약한 후보가 포기함으로써 양당제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수 형태가 아닌 혼합제(예: 지역구 다수제 +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있으며, Cox는 유효 정당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를 통해 파편화 정도를 측정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선거제도는 연립정부 구성과 내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 다수제는 안정적 단일 정당 정부를 형성하나 소수 이익 대표가 부족하며, 비례대표제는 포괄성을 높이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Duverger's Law의 게임이론적 확장은 이러한 제도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예를 들어 Osborne and Slivinski(1996)는 후보 위치 모델에서 공간적 투표 이론을 결합해 Duverger's Law를 증명한다.

제3절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오랜 논쟁거리로, Linz(1990)는 대통령제의 이원적 정당성(dual legitimacy), 즉 대통령과 의회가 정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 어떤 정책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정치적 교착(deadlock)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불안정이 초래되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저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라틴 아메리카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고전적 비판이다.

하지만 Mainwaring and Shugart(1997)는 대통령제의 문제가 제도 자체에 있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로 인한 다당제(multi-party systems)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은 Linz가 이 점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Linz(1990)가 승자독식(winner-takes-all)의 성격으로 인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의 충돌을 과장했으나, 실제 대통령제에서 분점정부가 발생하더라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Linz(1990)의 이론은 주로 개발도상국(라틴 아메리카) 사례에 치우쳐 있으며, 성공적인 대통령제 사례(예컨대, 미국 대통령제, 프랑스 세미대통령제 등)를 경시했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와 선택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Linz(1990)의 주장은 이론적이지 데이터 기반이 아니

라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남미의 대통령제 실패는 대통령제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나쁜 조합(대통령제 + 비례대표제/다당제)'이 실패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Mainwaring and Shugart, 1997).

Cheibub(2007)은 Linz(1990)를 확장해 대통령제가 의회와의 교착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고, 민주주의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140개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대통령제가 GDP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대상 국가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제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더 자주 채택될 수 있어 인과관계의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가난한 국가가 대통령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성장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제도 탓이라기보다는 초기 조건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Linz(1990)와 같이 Cheibub(2007)은 정치적 교착과 그로 인한 입법 난항을 강조했으나, 실제로 의원내각제에서도 연립정부는 대통령제의 분점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교착 상황을 나타낸다는 비판을 받는다.

McManus and Ozkan(2018)은 14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시간 더미를 추가한 랜덤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GDP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상 국가가 개발도상국 중심이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대통령제 성공이 과소평가되었고, 또한 경제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대통령제의 성과가 낮아 보이지만, 이는 초기 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Knutsen(2011)은 OECD 국가를 포함한 100여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제가 경제성장에 상당한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례대표제가 부분적으로는 특수이익을 위한 경제 정책보다는 보편적 교육 지출, 재산권 보호, 자유무역과 같은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세미비례대표제(semi-proportional system)도 다수대표제에 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도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시한 Acemoglu *et al.*(2019)

은 본 연구의 방법론적 통찰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 기존의 많은 실증 연구가 단기 변동성이 큰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1인당 실질 GDP의 자연로그값', 즉 장기적인 소득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기적인 경기 순환이나 충격에 민감하지 않고, 정치제도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위치에 미치는 누적된 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 Acemoglu *et al.*(2019)은 민주주의가 소득수준을 장기적으로 약 20%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며, 제도와 경제 성과 간의 관계를 '성장률'이 아닌 '소득수준'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Acemoglu *et al.*(2019)의 방법론적 통찰을 이어받아, 연구의 분석 대상을 '민주주의 vs. 권위주의'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OECD 민주주의 국가 내의 '미시적 제도 조합(정부형태, 선거제도, 권력구조)'으로 범위를 좁히고 기능 요소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제도적 설계가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을 극대화하여 장기 소득수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다.

제3장

이론적 논의와 가설

제1절 이론적 논의

본 절은 제2장에서 제시된 거시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 가설 도출에 직접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건부 효과 및 미시 제도 설계와 관련된 선행 실증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Haggard and McCubbins(2001)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책 형성 과정을 권력의 분할과 위임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각 정부형태의 차이와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다음은 그 핵심 요지이다.

정부형태는 권력 분할과 위임 방식의 차이로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분리된 권력(separated powers)은 융합된 권력(fused powers)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거부점(veto points)을 생성하여, 협상과 합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화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대통령제는 정책 결정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해 행정부의 재량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포획을 방지하며, 넓은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연립정부 형성이 어렵고, 입법 교착 상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위임(delegation)의 연쇄인데, 이 위임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가 정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은 대리인(대통령, 의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 대리인들은 다시 하위 기관(관료, 행정부처)에 권한을 위임하는데, 결국 주인-대리인 통제 메커니즘이 핵심이 된다. 제도는 행위자 간의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와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는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위임된 권한을 가진 대리인(정부 관료, 국회의원)은 주인(시민, 유권자)의 이익과 다른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대통령제는 권력 분산을 통해 대리인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안정성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으로 인해 대리인 간 담합이 발생하기 쉽다.

권력이 분산될수록 정책 변화를 위한 합의 비용은 증가하지만, 정책 결정 자체가 포획(capture)되는 위험은 감소한다. 정책 결정의 질은 단순히 강한 정부가 아니라 적절하게 통제되는 정부에 달려 있다. 강력한 지도력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도록 적절히 견제하고 책임 지우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는 단순히 정부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행위자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방식, 대리인 통제(agent control) 메커니즘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제는 권력 분산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할 여지를 제공한다.

Haggard and McCubbins(2001)는 어떤 정부형태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각 정부형태는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특정 정책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형태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정부형태 내부의 권한 배분, 선거 시스템, 정당 시스템 등의 미시적 제도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가 대리인 통제 메커니즘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Haggard and McCubbins(2001)의 주장은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제의 대리인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만 자세히 논의하고,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평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경우 총리가 수용하면 내각이 해체되고, 총리가 불신임을 거부하면 의회 자체가 해산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게 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는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관계를 벗어난 형태로 Tirole(1986)은 조직 내 계층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임의 위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내각의 담합(collus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의회가 내각을 감독하면서 관찰한 정보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내각은 재정배분 등을 통해 의회 다수당뿐만 아니라 전체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거나 혜택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의 담합은 정보 왜곡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인인 국민은 정치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부패 증가와 경제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 → 의회→ 내각 → 관료'의 긴 사슬에서 '의회-내각'이 융합되어 내각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내각과 담합하여 국민을 대신한 감시자가 사라지지만, 대통령제는 '국민 → 대통령 / 국민 → 의회'의 이원적 위임으로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호 감시가 작동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Gradstein(2008)은 저품질의 제도와 정치적 권력 집중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제도(institutions)의 질, 정치적 권력의 분배,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연결되어 지속적인 제도적 함정(institutional traps)을 형성하고, 정치권력의 균등한 분포가 제도의 질을 개선하는 보증 장치로 작용하는데,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은 민주화를 통해 권력을 포기하거나(토지개혁 등) 외부 개입을 통해 초기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권력 집중은 로비나 기여를 통해 정치적 편향을 유도하고, 이는 제도의 질을 악화시켜 재산권 보호 약화와 부패와 비효율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유인 약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둔화는 다시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권력은 더 집중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저성장의 함정은 아프리카 국가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권력 분산의 경로는 고품질의 제도와 높은 투자, 높은 성장, 불평등 감소, 제도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고 하고, 그 예로 동아시아(한국과 대만)의 성장 기적을 든다. 제도가 단순한 외생 변수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 분배(혹은 헌법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개발이나 성장 정책에서 권력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권력 집중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입법부)와 내각(행정부)의 융합으로, 그리고 권력 분산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부형태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해진다. 하지만 개별 국가의 정부형태에서 권력 집중과 분산이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나 정당 구조가 권력 분산 정도를 좌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Mauro(1995)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부패가 투자를 감소시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부패는 경제활동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자본축적을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58개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내생성 통제를 위해 인종언어적 분열 지표(ethno-linguistic fractionalization)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auro(2004)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를 근절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부패가 만연하면, 부패 근절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일시에 조정할 수 없다면 개인의 부패 근절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패가 만연할수록 개인의 부패 퇴치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패 근절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한다. 전략적 보완성과 다중 균형 모형을 통해 점진적 개혁보다는 대규모의 포괄적 개혁과 투명성 강화가 부패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생산성이 낮고 공공부문이 큰 국가는 낮은 생산성과 부패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부유한 국가는 부패가 드물고, 공공부문이 큰 국가는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인데, 이는 Mauro(1995)와 Tanzi (1998) 같은 실증적 증거와 일치한다.

Persson and Tabellini(1999)는 선거 규칙(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과 정부형태(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같은 정치제도가 정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Downsian 모델(선거 경쟁)과 입법 협상 모델(정책 결정)을 통해 분석한다. Downsian 모델(미래지향적 유권자)에서 다수대표제 선거(비례대표제 대비)는 지역구 경쟁을 강화해 공공재를 줄이고, 정치인 지대를 감소시키며, 재분배를 늘리고 정부를 확대한다. 입법 협상 모델(과거지향적 유권자)에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대비)는 정치인 간 경쟁과 지역구 간 경쟁을 높여 공공재, 정치인 지대, 재분배를 줄이고 정부를 축소한다. 이러한 예측을 1990년대 초반 국가 간 데이터로 검증하며, 대통령제에서 정부 축소에 대한 강한 증거를 확인한다. 반면, 다수대표제 선거의 공공재 감소 효과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대통령제가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Persson, Roland, and Tabellini(2000)는 미시 기반 정치 모델을 통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며, 이들이 조세, 공공재 공급, 재분배, 정치인 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모형은 의회 협상(legislative bargaining)을 중심으로 하며,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과 의회 결속(legislative cohesion)의 차이를 강조한다. 대통령제는 분권화로 인해 대통령의 잔여 청구권자(residual claimant) 지위가 약화하여 조세, 정치인 지대, 재분배가 낮게 결정된다. 반면, 의원내각제는 의회 내 연합의 결속력으로 연합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세와 정치인 지대가 높고, 재분배와 공공재가 광범위하게 분배된다. 실증 검증 결과, 대통령제 국가(라

틴 아메리카)에서는 정부 규모가 작고, 의원내각제(유럽)에서는 높은 지출과 높은 재분배 규모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통령제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ersson and Tabellini(2004a; 2004b)는 정치학에서는 헌법적 규칙의 정치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경제학이나 재정학에서는 헌법적 규칙은 배제하고 재정 규모만을 다루기 때문에 헌법적 규칙과 경제 정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헌법적 규칙(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이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민주주의 헌법의 주요 목적(책임성 강화와 대표성 확보)을 강조하며, 선거 규칙(지역구 규모, 선거 공식, 투표 구조)과 정부형태(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선택적 요소(지정학적 영향 및 역사적 요인)와 관성(변경 희소)을 고려한 인과추정을 중점으로 다룬다.

핵심 요지는 헌법 규칙이 책임성(재선 유인), 정치적 지대 혹은 부패, 대표성, 재정정책(지출,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헌법 규칙이 부패와 재정정책에 큰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 헌법 규칙이 경제정책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통령제와 다수대표제에서는 부패는 감소하고 정부 지출로 인한 혜택은 좁은 지역에 한정되지만,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넓은 지역에 혜택이 분배되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적자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는 대통령제가 부패통제와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Persson, Roland, and Tabellini(2007)는 의원내각제 민주주의에서 선거규칙(비례대표제 vs. 다수대표제)이 정부 지출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핵심은 선거 규칙이 정당 구조(분열도)와 정부형태(연립정부 vs. 단일정당 정부)를 통해 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비례대표제가 더 분열된 정당 시스템과 연립정부를 유발해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모형은 기회주의적 정치인(재선 동기)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며, 연립정부 내 선거 경쟁이 '선거적 공유자원(electoral common pool resources) 문제'를 초래해 과잉 지출을 유발한다. 실증적으

로 의원내각제로 구성된 민주 국가(50개국 단면, 40개국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인과성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비례대표제가 의원내각제에서 과잉 지출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상의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분권화로 인해 대통령의 잔여 청구권자 지위가 약화하여 조세, 정치인 지대, 재분배가 낮게 결정되지만, 의원내각제는 의회 내 연합정부의 결속력으로 내각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세와 정치인 지대가 높고, 재분배와 공공재가 광범위하게 분배된다. 여기에 더해 의원내각제에서 '위임의 위임'은 유권자-의회-내각의 다단계 위임으로, 입법과 행정의 융합(fusion of powers)이 발생한다. 이는 의회와 내각 간의 담합(collusion)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러나지 않는 부패(예: 로비, 정치자금, 정책 왜곡)를 키울 수 있다. 부패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부패한 내각을 감독할 권한을 담합에 가담한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이유를 설명한다. 북유럽의 성공은 제도(내각제) 덕분이 아니라 높은 사회적 신뢰와 동질성이라는 '초기 조건' 덕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조건을 통제했을 때의 순수 제도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제2절 가설 설정

가설 1.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기 조건을 고려한 장기 소득수준 측면에서 대통령제 국가의 정부 효과성이 의원내각제나 세미대통령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장기 소득수준을 초래할 가장 그럴듯한 기제를 내포할 것이다.

여기서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은 World Bank WGI의 정의, 즉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질, 공무원 역량, 공공서비스 품질을 의미한

다. 정부 효과성은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정부(의회 다수파와 내각)의 생존은 하원의 다수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은 단기적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하원의 다수파가 입법, 집행, 예산을 패키지로 통제하고, 짧은 선거 주기로 인해 정치적 비용은 집중되고 편익은 분산되고 즉각적인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정부 효과성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 효과성 정책보다는 의회 다수파 의원에게 재선을 보장할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예컨대, 지역구 예산, 공공사업, 보조금, 연립정부 파트너 요구 사업 등)에 집중하게 된다. 행정개혁, 공무원 역량, 디지털 전환과 같은 5~10년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정책사업은 선거 주기상 3~5년의 짧은 집행기간 내에 그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더욱이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예산 재배분은 특정 지역이나 부처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고, 내각이 불신임당할 위험을 수반한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4~5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재선의 경우 8~10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와 같은 내각 생존의 제약이 덜하다. 대통령제는 이러한 고정 임기와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정치적 보상(정치적 유산)이 가능해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의 후생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할 여지가 있다(Persson and Tabellini, 2004a; 2004b). 대통령제의 고정 임기가 주는 '시간적 여유'가 장기적 국가 역량 투자(state capacity building)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원내각제나 세미대통령제 국가보다 정부 효과성이 더 높은 장기 소득수준을 초래할 가장 그럴듯한 기제를 내포하며, 본 연구는 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논리는 WGI 정부 효과성 지표가 성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실증 증거와 연계된다.

그러나 반론이나 대안적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통령제 역시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여당이 의회 다수당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의원내각제와 같은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의

원내각제는 내각 생존 제약(survival constraint) 때문에 대통령제보다 단기적 성과(예: 선심성 예산)에 집중할 구조적 유인이 더 높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제 혹은 세미대통령제로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중임이 불가하므로 의원내각제적 비효율, 즉 정부 효과성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집행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가설 2.**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기 조건을 고려한 장기 소득수준 측면에서 대통령제 국가의 부패통제가 의원내각제나 세미대통령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장기 소득수준을 초래할 가장 그럴듯한 기제를 내포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원내각제에서 정부의 생존은 하원의 다수결에 달려 있기에 부패통제를 통해 다수파 의원의 사적 이익을 차단하면 정부의 생존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부패 형태는 지역구 예산, 공공 계약, 인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익은 지역에 집중되는 전형적인 공유자원의 특성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부패통제기관인 감사원, 검찰, 언론을 의회 다수파가 임명, 예산, 법률 등의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부패통제 강화로 인한 편익은 국민 전체에 분산되어 있지만 부패통제 완화에 따른 편익은 다수파 의원 개인, 지역구, 지지집단에 집중되고 선거자금, 지역 사업, 재선이라는 형태로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만약 부패통제를 위해 감사원 독립, 검찰 개혁, 정보공개법, 언론 규제를 시도하면 의회 다수파는 감사원장 임명권 장악, 검찰총수 임명 및 예산 압박, 예외조항 확대,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대응하고 그 결과는 통제된 감사, 선택적 수사, 핵심 계약 비공개, 부패 보도 억제로 귀결되어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고정 임기로 인해 부패통제는 정부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고,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하고 의회의 부패성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부패통제를 결정할 수 있고 분리된 권력으로 강하게 추진하여 그 효과가 클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

라, 권력분립으로 인해 발생한 부패가 더 잘 적발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의원내각제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패 공동체로서 발생한 부패를 덮을 유인이 크다. 반면, 연립정부 구성 시에는 상호 견제가 발생하여 부패를 방지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의원내각제는 의회-내각의 담합이 운명 공동체를 만들고 부패통제는 공동체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은 부패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사례로는 일본 자민당의 60년 장기 집권이 도로공사, 다목적댐 등의 공공사업을 통한 지역구 예산 확보로 재선을 보장받아 가능했는데 이는 부패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 초 뇌물 도시 또는 뇌물 공화국(Tangentopoli)이라고 불리는 연립정부 내 예산 쪼개기를 통한 대규모 정치 부패 스캔들이 있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5,000명에 육박하는 정치인, 기업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중 1,000명이 구속되고 400개 이상의 시의회, 마을 의회가 부패 혐의로 해산되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09년에 국회의원 경비 스캔들이 있었는데, 의정활동 예산을 애완견 사료비, 집 수리비, 이중 청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남용한 사실이 공개되어 국회의원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했고 2015년 의원 소환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가설은 WGI 부패통제 지표가 성장과 강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 **가설 3.**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기 조건을 고려한 장기 소득수준 측면에서 대통령제 국가의 정치 안정성이 의원내각제나 세미대통령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장기 소득수준을 초래할 가장 그럴듯한 기제를 내포할 것이다.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은 투자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장기 계약을 촉진한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내각을 구성하는데, 다수대표제의 경우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면 되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과반의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연립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다수파에 속하지 못한 정당의 공세

와 예측하지 못한 정책 실패로 인해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하거나 의회가 해산되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정책의 연속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경제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고정 임기로 인해 탄핵이나 유고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WGI 정치 안정성 지표는 이러한 안정성이 성장에 긍정적임을 뒷받침한다.

가설 4.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기 조건을 고려한 장기 소득수준 측면에서 대통령제 국가의 규제품질이 의원내각제나 세미대통령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장기 소득수준을 초래할 가장 그럴듯한 기제를 내포할 것이다.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은 시장 진입·퇴출 규제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민간 투자와 혁신을 촉진한다. 앞서 여러 차례 논의한 바와 같이 의원내각제의 정부는 하원 다수파의 불신임으로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규제 완화로 인한 편익은 분산되어 있고 미래지향적이지만 비용은 기존 규제 수혜자(기존 사업자, 공공부문 노동자, 지역 중소기업 등)에게 즉각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 지역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의회 다수파에 균열이 발생하고 정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손실보상 등의 패키지가 시도될 수 있지만, 다수파의 균열 가능성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

한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고정 임기로 인해서 규제 완화와 손실보상의 분리 입법이 가능하고 거부권을 통하여 과한 손실보상이 차단될 수 있다. 이러한 분리 입법과 거부권 협상을 통해 대통령제에서는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통해 정책 분리가 가능하고, 특정 이익집단이 거부권 행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요컨대,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규제 완화 법안과 보상책을 분리 입법할 수 있어 개혁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고, 동일한 규제품질 개선이 더 큰 성장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최소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의 포획된 규제나 과도한 규제 입법 시도에 대한 최종 방어선으로서, 규제품질을 보장하는 핵심적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도 규제 완화가 성공한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데 영국 Thatcher의 1980년대 민영화이다. 강력한 다수 보수당의 지원으로 총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1990년대 일본의 우정 민영화는 연립정부와 지역구 이익의 반대로 인해 10년 이상 지연되었다.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은 대연정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보상책을 대폭 추가하여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 **가설 5.**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기 조건을 고려한 장기 소득수준 측면에서 대통령제 국가의 법치주의가 의원내각제나 세미대통령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장기 소득수준을 초래할 그럴듯한 기제를 내포할 것이다.

여기서 법치주의(rule of law)는 World Bank WGI의 정의, 즉 사회 규칙 준수에 대한 신뢰, 계약 집행 품질, 재산권 보호,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및 공정성, 범죄와 폭력 수준 등을 포괄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 생존이 하원의 다수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견제는 정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무효로 하여 정부 생존을 위협한다. 사법부가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충격을 가하고 정부의 생존을 위협하면 의회 다수파는 생존 방어 수단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공격할 유인을 갖는다. 실제 사용되는 사법부 견제 전략은 사법부 인사권을 장악하여 재판관 임명을 통제하거나, 사법부 예산을 통제하여 압박하거나, 위헌 결정 이후에도 동일 내용을 재추진하거나, 사법부에 대한 정치화 프레임으로 여론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고정 임기로 인해 사법부 판결은 정부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재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생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법부 견제 동기가 약하고, 위헌 부분을 분리하여 정책 추진이 가능하여 사법부 독립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전제로 하므로 사법부가 외생적 제약이어도 정부의 생존에는 영향이 없다(Persson and Tabellini, 2004a; 2004b).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사법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럴 유인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집행부와 입법부의 생존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동맹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법치주의가 경제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자. 법치주의는 계약 집행과 투자자 보호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치는 장기 투자를 유인하여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며, 정부 견제를 통해 독재를 막으며, 기업과 외국인의 장기 투자를 촉진한다. 반면, 법치주의가 저해되어 사법부가 정부와 정치인에 종속되면 정치권력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유재산을 몰수하거나 뇌물을 요구할 수 있어 투자가 억제되며, 정책 뒤집기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견제가 사라져 약탈 정책이 시행되며, 투자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져 자본이 유출되고 투자가 감소한다(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5; La Porta, *et al.,* 1998; Persson and Tabellini, 2000). WGI 법치주의 지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가설 1~5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커니즘을 공유한다. 의원내각제의 '내각 생존 제약(survival constraint)'이 장기적이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가져오는 거버넌스 개선(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규제품질, 법치주의)을 체계적으로 저해하는 반면, 대통령제의 '생존 분리(separation of survival)'와 고정 임기는 정치적 시간 지평(political time horizon)을 연장하여 동일한 거버넌스 투자의 경제적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Persson and Tabellini, 2003; 2004a; 2004b).

제4장

분석 방법

제1절 분석 모형

본 연구는 OECD 38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체제의 미시적 차이—정부형태(대통령제, 세미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거규칙(소선거구제 vs. 중대선거구제), 권력구조(삼권분립 vs. 권력융합)—가 정부역량(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정치적 안정성, 규제품질, 법치주의)을 통해 장기 경제발전 수준, 즉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ln GDP per capita)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은 System GMM으로 설계되었으며, 종속변수는 Acemoglu *et al.*(2019)의 방법론을 따라 성장률이 아닌 소득수준의 로그값으로 설정하여 회귀-평균 편향, 내생성, 단기 변동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체제의 장기적 누적 효과를 정밀하게 포착한다.

System GMM 추정 전략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체제 변수는 국가별로 시간 불변적이거나 준불변적이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델(fixed effects)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고정효과 모델은 시간 불변 변수를 자동으로 제거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랜덤효과 모델(random effects)을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종속변수로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종속변수가 현재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랜덤효과 모델에 전기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국가별 고유효과는 현재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 종속변수는 시간 불변의 국가 고유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랜덤효과 모델의 추정량은 일치성을 잃게 되고 계수 추정치에 심각한 편의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전기 종속변수를 생략하고 랜덤효과 모델을 사용하면 생략된 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여 계수 추정치가 왜곡된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장기 효과가 정부역량을 통해 누적된다는 이론적 가정을 반영해, 소득수준의 특성을 고려한 Arellano-Bover/Blundell-Bond System GMM(xtabond2 패키지)을 적용한다. System GMM은 동적 패널 데이터에서 내생성과 니켈 바이어스(Nickell bias)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우수하며, 특히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민주주의나 제도의 장기 효과를 추정할 때 널리 사용된다.

기본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n y_{i,t} = \beta_0 + \beta_1 \ln y_{i,t-1} + \sum_{k>1} \beta_k (Regime_i \times Governance_{k,i,t}) + \gamma X_{i,t} + \mu_i + \epsilon_{i,t}$$

여기서 Regime은 6개 시간 불변 체제 조합 더미(ps, pm, ss, sm, cs, cm) 또는 각 축별 더미(pre/sem/par, smd/mmd, sep/fus)이다. Governance는 5개 정부역량 지표, 즉 정부 효과성(ge), 부패통제(cc), 정치적 안정성(ps), 규제품질(reg), 법치주의(leg)를 나타낸다. β_k는 조건부 효과를 나타낸다. X는 시간 변동 통제변수(trd, inflat, lnfdiin, oil_rent, aging)와 시간 불변 통제변수(esp_colony, former_ussr, legor_sc)를 포함한다. μ_i는 시간 불변 관찰 불가 개체 고유효과를, $\epsilon_{i,t}$는 순수 오차(idiosyncratic error)를 나타낸다. 기본 회귀식은 1기 지연된 종속변수($\ln y_{i,t-1}$)를 포함하며, β-수렴과 내생성을 동시에 처리한다. 핵심 설명변수는 정부역량 5개 지표(WGI)와 정치체제 더미 간의 교차항(Regime × Governance Indicator)으로, 이를 통해 대통령제하에서 부패통제나 정부 효과성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의원내각제보다 큰지 — 즉, 가설 1~5 — 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도

구변수는 내부적으로 거버넌스 변수, 외부적으로는 스페인 식민지 경험, 구소련 경험과 스칸디나비아 법적 기원 더미를 수준방정식(level equation)에만 활용하였으며, Hansen J 검정과 AR(2) 검정을 통해 도구변수의 유효성과 잔차의 자기상관 부재를 확인한다. 이는 Acemoglu *et al.* (2019)처럼 내생성을 내부 도구로 처리하고 장기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역인과관계와 생략변수 편향을 최소화한다.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는 정치체제 더미와 정부역량 지표의 교차항으로, 이는 정치체제가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marginal return)을 조절(moderate)하는 효과를 식별한다. 이는 엄밀히 말해 조절효과(moderation)이며, 정치체제가 정부역량 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매개효과(mediation)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론적으로 대통령제의 고정 임기와 권력 분립은 장기적 거버넌스 개선의 정치적 유인을 강화하여 정부역량 수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예: Persson and Tabellini, 2004a; 2004b), 본 연구의 패널 구조에서 정치체제는 시간 불변이므로 수준 효과는 직접 식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결과는 '동일한 정부역량 개선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제에서 경제적 환산 효율이 더 높다'는 조건부 인과관계를 주로 입증한다. 역인과성 및 생략변수 편향은 System GMM의 내부 도구와 외부 도구(esp_colony, former_ussr, legor_sc)를 통해 최소화하였으나, 완전한 외생성은 역사적 경로 의존성으로 인해 제한적임을 인정한다.[1]

이러한 분석 전략은 중재·조절 효과(System GMM)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 인과적 기제(causal mechanism)를 규명한다. 특히 OECD라는 동질적 제도권 내에서 제도적 미세 조정이 정부

1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변수들은 엄밀한 의미의 전통적인 도구변수(IV, 예: 사망률, 정착민 밀도)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변수들은 단순한 통제를 넘어 핵심 설명변수의 외생적 변이를 제공하고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의 핵심 부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정치체제의 외생적 역사적 결정요인(exogenous historical determinants)으로, 제도의 장기 성과를 추정할 때 생략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을 방지하거나 경로 의존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성과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함으로써, 비교정치경제학의 실증적 경계선을 확장한다.

제2절 변수, 분석자료와 기술통계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체제의 미시적 설계가 정부 역량을 매개로 장기 경제발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1991~2023년 연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다. 정치체제 변수는 기존 문헌의 이분법적 민주주의 지표를 넘어 정부형태(presidential, semi-presidential, parliamentary), 선거제도(single-member vs. multi-member districts), 권력구조(separation vs. fusion of powers)의 세 축을 교차하여 6가지 체제 조합과 각 축별 더미를 동시에 구성하였다. 이러한 세분화는 정치제도의 조합별·축별 효과를 정밀하게 분리하고, 상호작용 및 조건부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필수적 설계이다.

1.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일반적인 동시대적 통제변수(인플레, 노령화, 무역의존도, 외국인직접투자, 석유지대 등)와 '역사적, 지리적 제도 유산 통제변수'로 구분된다. 역사적, 지리적 더미는 단순히 동시대적 요인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정치체제의 내생적 결정 경로와 거버넌스 품질의 초기 조건을 결정하는 역사적 제도 이식 유산을 포착한다. 이는 System GMM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내생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보완하며, 본 연구의 핵심 식별 전략(identification strategy)을 구성한다.

일반 통제변수(trd, inflat, aging, oil_rent 등)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고, 경제 구조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더라도 추정계수의 변화가 작다. 반면 역사적, 지리적 제도 유산 통제변수는 시간 불변일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컨대, 스페인 식민지와

대통령제, 북유럽 법제와 의원내각제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더불어 그 국가의 소득과 거버넌스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Acemoglu *et al.,* 2019; La Porta *et al.*, 1998). 이들은 강한 외생성(strict exogeneity)을 만족하는 준도구변수(quasi-IV)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System GMM에서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소련 국가, 스페인 식민지 경험 국가, 그리고 북유럽 국가를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는 동일한 제도적 틀 안에서도 역사적·지리적·법체계적 경로가 다르면 세부적인 제도 작동 방식과 정치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그룹은 '같은 제도, 다른 결과' 현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연실험 사례로, 제도적 변이를 통제하는 데 이상적인 기준점을 제공한다.

1991년 소련 붕괴는 15개 신생 독립국에 동일한 출발점을 부여했다(Fish, 2005). 그러나 이들 국가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의회주의, 다당제, 자본주의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으며, 붕괴 직후 권력 공백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압력이 겹쳤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구소련 국가는 초대권적 대통령제—법령 제정권, 의회 해산권, 군 직접 통제, 사법부 영향력—를 채택했으며, 의회는 형식적 역할을 맡는 데에서 그쳤다(Linz and Stepan, 1996). 이는 대통령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급진적 전환과 권력 집중의 역사적 경로가 제도를 왜곡시켰음을 시사한다.

스페인 제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자원 수탈에 초점을 맞춘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식민지에 이식했다(North and Thomas, 1973). 19세기 독립 이후 중남미 국가들은 이 구조를 물려받아 초대권적 대통령제를 발전시켰으며, 대통령은 헌법 개정 주도, 사법부 장악, 군 통제 등의 권한을 가졌다. 동시에 연성헌법(평균 수명 12년), 다당제에 따른 분점정부, 포퓰리즘 정치가 일상화되었다(Negretto, 2013). 특히 Acemoglu *et al.*(2019)은 이러한 스페인 식민지의 수탈형 제도가 독립 이후에도 '포획된 민주주의(captured democracy)'—소수 엘리트가 제도를 장악해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왜곡하는 현상—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스페인 식민지 경험이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과 정치 불안정을 동시에 낳는 독특한

제도적 경로를 형성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페인 식민지 경험 국가 더미의 포함은 대통령제의 경제적 우위를 과소평가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북유럽은 서유럽과 달리 봉건제가 약하게 발달했고, 자유농민 중심의 평등주의 사회와 지역 자치 전통(예: 아이슬란드 알팅, 930년 설립)을 유지했다(Strøm, 1990). 19세기 말 점진적 민주화 과정에서 부정적 의회주의(정부는 과반 찬성 없이도 과반 반대만 없으면 존속)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고, 소수 정부가 전체 정부의 70~90%를 차지하게 되었다(Bergman, 1993). 스칸디나비아 법체계의 간결성, 합의 중심성, 법원 독립성은 이를 뒷받침하며, 소수 정부하에서도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기후 정책 등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Arter, 2008). 이는 의원내각제가 반드시 다수 연립정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결국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그 세부적인 작동 방식(권력 분산 vs. 집중, 정부 안정성, 개혁 속도)은 제도 자체보다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발전경로에 더 크게 좌우된다. 구소련은 체제 공백으로 초대권적 대통령제를, 스페인 식민지는 수탈 행정으로 권력 집중과 불안정을, 북유럽은 평등·합의 전통으로 안정된 소수 정부를 낳았다. 따라서 이 세 그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면 제도 형식 너머의 경로 의존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역사적 조건에 따른 특수성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체제의 경제 성과에 대한 한층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2. 종속변수

정부형태, 선거규칙, 권력분립 등의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종속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각 국가의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의 조합이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고했다(Knutsen, 2011; Milesi-Ferretti *et al.*, 2002; Persson and Tabellini, 2003). 그러나 성장률을 이용한 분석이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연평균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활용했으나, 결과가 상충되었다. 일부 연구는 민주주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았고(Barro, 1996), 다른 연구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했으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했다(Tavares and Wacziarg, 2001). 이러한 모순의 근본 원인은 성장률의 통계적·이론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아래에서 성장률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ln GDP per capita)의 장점을 자세히 논의한다.

첫째, 성장률은 초기 소득수준에 따른 회귀-평균(regression to the mean) 현상으로 인해 체계적 편향이 발생한다. 저소득 국가는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쉽고, 고소득 국가는 성숙 단계에서 성장률이 둔화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간 성장률 차이는 정치체제 자체보다 초기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면 초기 소득수준을 회귀식에 명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정치체제의 순수한 영향을 분리해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성장률과 정치체제 간에는 내생성 문제가 심각하다. 높은 성장률은 민주화를 촉진하고(Lipset 가설), 반대로 경제 위기는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생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면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은 과거부터 누적된 정치·제도적 환경의 장기적 결과물로 간주되므로, 현재 정치체제가 미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역인과관계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성장률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 외부 충격, 정책 변화 등에 매우 민감해 잡음(noise)이 많다. 심지어 5년 평균 성장률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은 장기적인 경제 균형 수준을 반영하므로, 연간 변동이 평균화되어 신호 대 잡음 비율(Signal-to-Noise Ratio)이 훨씬 높아진다.

넷째, 정치체제의 효과는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비선형적일 수 있어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 t-검정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포착하기 어렵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초기 소득과의 교차 항이나 비선형 항을 쉽게 포함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저소득 국가에서는 성장에 긍정적이고 고소득 국가에서는 중립적이라는 조건부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치체제 외에도 인적자본, 투자율, 무역 개방도, 지리적 조건 등 다양하다. 성장률 비교는 이러한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지만, 패널 데이터 고정효과 모델이나 도구변수(IV) 회귀는 다변량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체제의 독립적 기여도를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성장률 데이터는 분산이 크고 좌우 비대칭 분포를 보여 통계적 가정(정규성, 등분산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은 분포가 정규에 가까워 OLS 추정량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속도'를,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은 '위치'를 나타낸다. 정치체제는 단기적인 성장 속도보다는 장기적인 제도적 환경을 통해 소득수준, 즉 경제 발전의 위치에 더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성장률이 아닌 자연로그화된 일인당 국민소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분석이 이론적 타당성과 실증적 신뢰도 측면에서 우월하다.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Acemoglu *et al.*(2019)은 성장률 대신 ln GDP per capita를 종속변수로 채택해 기존 연구의 편향을 극복했다. 1960~2010년 184개국의 패널 데이터로 동적 GMM 회귀를 수행한 결과, 민주화는 소득수준을 약 20~30%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률 분석에서 잡음과 편향으로 드러나지 않던 민주주의의 장기적 영향을 포착한 것이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가 단순 상관이 아닌 성장의 인과적 원인임을 증명하며, 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장기 패널 데이터의 통찰은 민주주의가 경제 번영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자료와 기술통계

<표 4-1> 및 <표 4-2>는 OECD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정부형태(대통령제, 세미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거제도(소선거구제 vs. 중대선거구제), 권력구조(삼권분립 vs. 권력융합)의 세 축으로 세분화한 더미변수들의 정의와 분포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정치체제의 조합이 단순히 민주주의 여부를 넘어 정부역량(효율성, 부패통제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제(mechanism)를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6가지 체제 조합(ps, pm, ss, sm, cs, cm)과 3가지 축(pre/sem/par, smd/mmd, sep/fus)을 동시에 포함하여 정치제도의 미시적 차이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를 정밀하게 포착하고자 한다.

<표 4-2>는 OECD 국가들의 정치체제 분포가 극히 편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의원내각제(par)가 전체 관측치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cm 체제가 44.0%로 사실상 OECD의 '표준 체제'라 할 수 있다. 반면 순수 대통령제(pre)는 13.5%, 삼권분립(sep) 역시 13.5%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회 중심·권력융합형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다수 국가가 비례대표적 요소가 강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는 미국, 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주로 신대륙 국가들에 국한되며, 삼권분립 역시 이들과 거의 일치하는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높은 편중성은 국가 간 변동성(between- variation)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므로, 후속 회귀분석에서 패널 내 변동성(within-variation)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준다.

<표 4-1> 정부형태 관련 변수(체제 더미) 설명

변수명	설 명	출 처
ps	해당 국가가 대통령제(presidential),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미국, 칠레, 멕시코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Data (QoG) 및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DPI)
pm	해당 국가가 대통령제(presidential),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컬럼비아, 코스타리카	
ss	해당 국가가 세미대통령제(semi-presidential),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프랑스, 한국, 리투아니아, 폴란드(07년 이후), 스위스	
sm	해당 국가가 세미대통령제(semi-presidential),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포르투갈(82년 이전), 폴란드(06년 이전)	
cs	해당 국가가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호주, 캐나다,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94년 이후), 일본, 라트비아(07년 이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cm	해당 국가가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93년 이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06년 이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83년 이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에	
pre	해당 국가가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Data (QoG)
sem	해당 국가가 세미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par	해당 국가가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smd	해당 국가가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DPI)
mmd	해당 국가가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sep	해당 국가가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Data (QoG)
fus	해당 국가가 권력융합(Fusion of Powers)에 해당하는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표 4-2> 정부형태 관련 변수(체제 더미)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ps	1,687	0.076	0.266	0	1
pm	1,687	0.059	0.235	0	1
ss	1,687	0.112	0.316	0	1
sm	1,687	0.015	0.123	0	1
cs	1,687	0.297	0.457	0	1
cm	1,687	0.440	0.497	0	1
pre	1,687	0.135	0.342	0	1
sem	1,687	0.127	0.334	0	1
par	1,687	0.737	0.440	0	1
smd	1,687	0.485	0.500	0	1
mmd	1,687	0.515	0.500	0	1
sep	1,687	0.135	0.342	0	1
fus	1,687	0.865	0.342	0	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정부역량은 정치체제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핵심 중간기제(intermediate mechanism)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지표를 통해 정부 효과성(ge), 부패통제(cc), 정치적 안정성(ps), 그리고 QoG의 규제품질(reg), 법치주의(leg)를 측정하였다(표 4-3 참조). WGI 원점수(약 −2.5~2.5)는 음수 값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로그 변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점수(x)를 $y = \log(x + 2.5)$ 형태로 변환하여 모든 값을 양수로 만들고, 동시에 비대칭적인 원점수 분포를 정규에 가깝게 변환함으로써 회귀분석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 변수들은 정치체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 즉, 제도적 성과(institutional performance) — 를 반영하며, 경제안보의 핵심 구성요소인 예측 가능성, 투자 유인, 자원배분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WGI 지표의 원점수는 대략 −2.5에서 +2.5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이를 로그 변환하기 위해 log(x+2.5) 공식을 적용했다. 이 변환으로 인해 변환 후 지표가 1단위 상승하는 것은 원점수 기준으로 약 2.0~2.5점 정도 개선

<표 4-3> 정부역량 관련 변수 설명

변수명	설 명	출 처
ge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estimate 값에 2.5를 더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cc	부패 통제성(Control of corruption): estimate 값에 2.5를 더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	
ps	정치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estimate 값에 2.5를 더한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	
reg	신용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 등의 지표로 구성되며, 0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함을 의미함.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Data (QoG)
leg	사법 독립성의 정도. 0에 가까울수록 사법 독립성이 없음을 의미함.	

자료: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되는 것에 해당한다(전체 스케일 5점 중 40~50%에 달하는 상당한 변화).

그러나 실제 정책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의 개선은 훨씬 작다. OECD 국가들에서 각 WGI 지표의 표준편차는 보통 0.18~0.34 정도이다. 따라서 1 표준편차(현실적으로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은 변환 후 지표에서 약 0.18~0.34단위 상승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대통령제의 정부 효과성 개선 효과가 변환 후 0.471로 추정되었다면, 이는 원점수 기준으로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극단적 개선(약 2.3점 상승)을 가정할 때의 효과이다. 현실적인 1 표준편차(0.179)의 개선(약 0.18단위)으로는 소득수준 상승 효과가 약 8.8% 정도로 환산되고, 이는 행정개혁이나 공무원 역량 강화와 같은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제도개선의 장기 소득 효과를 나타낸다.

<표 4-4>의 기술통계에서 정부역량 지표들은 OECD 국가들이 세계 평균(대체로 0 근처)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 효과성(ge)과 부패통제(cc)는 각각 1.29,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OECD가 행정역량과 청렴성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함을 입증한다. 규제품질(reg)과 법치주의(leg) 역시 7점대 중반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4-4> 정부역량 관련 변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ge	950	1.290	0.179	0.699	1.578
cc	950	1.268	0.245	0.392	1.601
ps	950	1.105	0.340	-2.088	1.449
reg	1,071	7.162	1.056	2.306	9.313
leg	1,072	7.386	1.310	3.015	9.465

자료: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그러나 정치적 안정성(ps)의 경우 평균은 1.105로 양호하나 표준편차가 0.34로 가장 크고, 최솟값이 −2.088까지 내려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그리스(2010~15년 재정위기), 헝가리·폴란드(2010년대 사법개혁 논란), 터키(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스페인(카탈루냐 분리주의) 등 일부 국가에서 심각한 정치적 충격이 발생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체제가 단순히 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제 운영 성과(performance)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후속 분석에서 정부역량을 중간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변동성을 제공한다.

<표 4-5>의 종속변수 gdp는 2021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의 자연로그값으로,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발전 수준(level of development)을 측정한다. 이는 Acemoglu *et al.*(2019)의 접근을 따라, 성장률의 단기 변동성과 회귀-평균 편향을 피하고, 정치체제의 장기적 누적 효과를 포착하기 위함이다. 자연로그화는 백분율 변화 해석을 용이하게 하며, 분포 정규화를 통해 회귀분석의 통계적 안정성을 높인다.

통제변수들은 역사적 유산(esp_colony, former_ussr, legor_sc), 경제구조(trd, inflat, lnfdiin, oil_rent), 인구구조(aging)를 포괄한다. 특히 스페인 식민지와 구소련 경험은 제도적 관성(institutional inertia)을, 법적 기원(스칸디나비아)은 규범적 차이를 반영한다. 무역의존도, 인플레이션, FDI, 석유지대는 경제안보의 외부 충격 요인이며, 고령화지수는 장기 성장 제약으

<표 4-5> 종속변수 및 기타 독립변수・통제변수 설명

변수명	설 명	출 처
gdp	(2021년 국제 달러화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의 자연로그값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esp_colony	스페인 식민지(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에 해당하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더미변수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Data(QoG)
former_ussr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및 위성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였던 국가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더미변수	외교부
legor_sc	국가의 상업 법전의 기원이 스칸디나비아인 경우 1, 그 외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Data(QoG)
trd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존도(GDP 대비 백분율)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inflat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되는 인플레이션(연간 백분율 변화)	
lnfdiin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자연로그값	UN trade & development (UNCTAD)
oil_rent	지역 가격으로 평가한 원유 생산 가치와 총생산비용의 차이,석유 지대(GDP 대비 백분율)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aging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10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외교부(접속일: 2025. 9. 18).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변수는 정치체제 효과의 외생적 요인을 통제하여 순수한 인과효과를 분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표 4-6>에서 종속변수 gdp(2021년 PPP 1인당 GDP의 자연로그)의 평균은 10.549로, 이는 1인당 GDP 약 38,400달러에 해당하며, OECD 국가의 높은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표준편차 0.517은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존재하지만, 로그 스케일에서는 비교적 균질함을 보여 회귀분석에 적합하다. 최소 9.210(약 10,000달러, 터키, 멕시코 수준)에서 최대 11.835(약 137,000달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수준)까지 약 13배로 패널 내 변동성이 충분함을 나타낸다.

통제변수 중 무역의존도(trd) 평균 75%는 OECD의 개방성을, 인플레이

<표 4-6> 종속변수 및 기타 독립변수・통제변수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gdp	1,292	10.549	0.517	9.210	11.835
esp_colony	2,866	0.109	0.312	0	1
former_ussr	2,866	0.134	0.341	0	1
legor_sc	2,866	0.136	0.343	0	1
trd	1,987	75.049	49.448	5.727	394.221
inflat	2,215	11.358	50.335	-4.448	1,281.443
lnfdiin	1,176	0.739	1.144	-4.605	5.456
oil_rent	1,735	0.545	1.388	0	11.726
aging	2,432	64.960	38.501	5.617	253.765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접속일: 2025. 0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0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06.04.); 외교부(접속일: 2025. 09. 18.)

션(inflat) 평균 11.36%는 일부 국가의 불안정성을 시사한다. 인플레이션의 극단적인 최댓값(1,281%)은 1990년대 초 동유럽 전환기 국가들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안정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FDI 유입(lnfdiin)은 로그 변환 후 평균 0.739로, 양수 중심 분포이나 최소 -4.605(거의 0에 가까운 유입)까지 존재해 투자 환경의 이질성을 드러낸다. 고령화지수(aging)는 평균 65로, 초고령화 단계에 가까우며, 최대 253.765(일본 수준)까지 치솟아 인구구조가 성장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정치체제와 장기 경제발전 수준

본 연구는 Arellano-Bover/Blundell-Bond System GMM을 적용하여 OECD 38개국의 1995~2023년 패널 데이터(최대 1,048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정치체제의 미시적 구조(정부형태, 선거규칙, 권력구조의 조합)가 정부역량 5개 지표(정부 효과성(ge), 부패통제(cc), 정치적 안정성(ps), 규제품질(reg), 법치주의(leg))를 통해 장기 경제발전 수준(자연로그화된 1인당 국민소득, ln GDP per capita)에 미치는 조건부 인과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였다. 모든 회귀식은 1기 지연된 종속변수(L.gdp)를 포함하여 β-수렴과 동태적 내생성을 동시에 통제하였으며, 핵심 설명변수는 정치체제 더미 × 거버넌스 지표의 교차항(Regime × Governance Indicator)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각 체제하에서 정부역량 1단위 개선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환산 효과(marginal return)를 체계적으로 분해하였다.

시간 불변 외부 변수는 차분 방정식에서 제거되므로, Roodman(2009b)의 권고에 따라, 수준 방정식에 도구변수로서 시간 불변 관찰 불가 개체 고유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다. 도구변수는 2~4기 지연된 내생변수와 외부 도구(스페인 식민지 유산, 스칸디나비아 법적 기원, 구소련 경험)를 활용하였다. Hansen J 검정 p-value는

0.035~0.107로 과도구 귀무가설이 일부 모형에서 근소하게 기각되었으나, 이는 도구변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Hansen 검정이 과잉 기각되는 편향(Roodman, 2009a)에 기인한다. Arellano-Bond AR(2) 검정 p-value는 0.389~0.878로 잔차의 자기상관 부재는 일관되게 확인하였다.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이질적 분산 문제를 보정하였다.

1. 공통 통제변수 및 동태적 구조

모든 모형에서 1기 지연된 소득수준(L.gdp)의 계수는 0.599에서 0.760 사이로 추정되며,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p < 0.01$). 이는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초기 소득수준이 다음 해에도 강하게 유지되는 동적 안정성을 나타낸다. 수렴속도는 연간 24%에서 40%에 달하여 경제성장이 동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 − 0.760 = 0.240). 이는 정부역량의 동적 중재 효과가 장기 소득수준의 변동성을 크게 설명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부표 1~20 참조).

역사적, 제도적 통제변수 중 스페인 식민지 경험(esp_colony)은 -0.083에서 -0.382 사이의 강한 부정적 계수를 보이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p < 0.01 \sim 0.05$)하다. 이는 스페인 식민지 유산을 가진 국가들이 동질적인 경제·정치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 소득수준이 8.3%에서 38.2%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구소련 경험(former_ussr) 역시 -0.128에서 -0.271 사이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p < 0.01 \sim 0.05$)을 보이며, 공산주의 체제의 제도적 잔재가 여전히 경제 성과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법적 기원(legor_sc)은 0.026에서 0.211 사이의 긍정적 효과($p < 0.01 \sim 0.10$)를 유지하여, 법체계의 질이 장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점을 재확인한다.

한편, 이들 역사적, 지리적 더미변수(esp_colony, former_ussr, legor_sc)는 단순 통제변수가 아니라 정치체제의 외생적 역사적 결정요인으로, 제도의 장기 성과에 대한 경로 의존성을 통제한다(Acemoglu *et al.*, 2019;

La Porta *et al.*, 1998). 이들을 제거했을 때, 예컨대 대통령제 × 정부역량의 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데, 이는 이들 변수가 '제도적 우위 효과를 억압하는 미관측 내생성 요인(unobserved confounders)'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이 변수들을 제외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낮은 효율성이 전체 대통령제 그룹의 효과를 희석시켜, 순수한 제도적 잠재력을 식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변수는 핵심 식별을 위한 전략적 요소이며, 이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이 변수들을 제외하면 해당 그룹의 성과가 통제되지 않아 평균이 떨어지거나 높아져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진짜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제도의 성과가 역사적 경로에 의존한다는 실질적 증거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샘플에서 대통령제의 경제 성과 우위가 약화되거나 역전되는 경향이 관찰된다(Gerring, Thacker, and Moreno, 2009). 반면, Cheibub(2007)은 이러한 차이가 제도 자체가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같은 도전적 환경에서 대통령제가 자주 채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대통령제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기보다, 역사적 유산이 제도 성과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낸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구조 변수 중 무역의존도(trd)는 0.002에서 0.004로 소폭이지만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p < 0.01 \sim 0.10$)를 가지며, 인플레이션(inflat)은 -0.004에서 -0.010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p < 0.01 \sim 0.05$)을 보인다. 석유지대(oil_rent)는 일부 모형에서 0.007에서 0.014로 자원 축복 효과($p < 0.01 \sim 0.05$)를 나타낸다. FDI 유입(lnfdiin)과 고령화(aging)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 > 0.10$), OECD 내에서는 이들 요인이 장기 소득수준에 체계적인 차이를 유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조합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회귀계수는 종속변수 ln(GDP per capita)에 대한 semi-elasticity이다. 따라서 계수×100은 소득수준의 percentage point(%p) 증가를 나타내며, 정확한 실질 증가율은 100×(exp(β)−1)%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정부 효과성에 대한 계수 0.471은 약 47.1%p 증가를 의미하나, 정확한 소득 증가율은 exp(0.471)−1≈60.2%이다.

가. 가설 1(정부 효과성) 검증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s)에서 정부 효과성 1단위 개선은 소득수준을 44.5%p(100×(exp(0.368)-1)=44.5)에서 60.2%p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모형에서 매우 유의미($p < 0.01$)하다.[2] WGI 지표는 원점수(−2.5 ~ +2.5)를 log(x + 2.5)로 변환한 값이다. 따라서 변환 후 1단위 상승은 원점수 기준 약 2.0~2.5점(전체 스케일의 40~50%)에 해당하는 극단적 개선이다. OECD 국가들의 지표 표준편차는 0.179이므로, 1표준편차 개선(변환 후 약 0.18단위)은 정책 수립·집행 품질의 현실적 향상(예: 행정개혁, 공무원 역량 강화)을 나타낸다. 주요 계수(예: 0.471)는 1표준편차 기준으로 약 8.8%(β_sd=0.471×0.179≈0.084, exp(0.084)−1≈0.088, 8.8% 증가) 소득 상승으로 환산된다.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m) 역시 43.6%p에서 57.9%p의 유사한 환산 효과를 보인다. 반면, 세미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ss)와 의원내각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cs)는 효과가 약하거나 불안정하며, 세미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sm)와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cm)는 거의 효과가 없다(부표 1~5 참조).

---

2 본 연구의 계수는 ln(GDP per capita)에 대한 값이다. 따라서 계수 × 100은 소득수준의 percentage point 증가를 의미하며, 정확한 % 증가는 (exp(β)−1) × 100(예: 0.471 → 약 60.2%)로 계산된다.

<표 5-1>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분석 결과

정부역량 / 조합	정부 효과성 (ge)	부패통제 (cc)	정치 안정성 (ps)	규제품질 (reg)	법치주의 (leg)
대통령제+ 소선거구제(ps)	0.471***	0.337***	0.202**	0.043***	0.064**
	(0.157)	(0.110)	(0.089)	(0.016)	(0.025)
대통령제+ 중대선거구제(pm)	0.457***	0.248**	0.056	0.038**	0.051**
	(0.172)	(0.104)	(0.038)	(0.016)	(0.023)
세미대통령제+ 소선거구제(ss)	0.235	0.132	-0.061	0.019	0.032
	(0.157)	(0.100)	(0.057)	(0.024)	(0.027)
세미대통령제+ 중대선거구제(sm)	0.106	-0.025	-0.217***	-0.003	0.014
	(0.205)	(0.135)	(0.055)	(0.027)	(0.033)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cs)	0.283*	0.182**	0.003	0.023	0.038
	(0.155)	(0.091)	(0.068)	(0.019)	(0.024)
의원내각제+ 중대선거구제(cm)	0.162	0.057	-0.119*	0.014	0.021
	(0.157)	(0.103)	(0.069)	(0.029)	(0.030)

주: 1) 종속변수는 ln(gdp),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위 표는 <부표 1>~<부표 5>의 모형 (4)(연도 더미 + 전체 통제변수 + 1기 지연 종속변수 포함) 결과임. 전체 분석 결과는 <부표 1>~<부표 5>에 수록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한편, 1기 지연 종속변수의 계수가 0.599~0.760으로 연간 수렴 속도가 24~40%에 달하며, 이는 정부역량의 동적 중재 효과가 장기 소득수준 변동성을 크게 설명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대통령제+소선거구제(ps)하에서 정부 효과성 1단위 개선의 단기 계수는 0.471이지만, 장기 승수는 $1/(1-0.68)\approx3.13$배이므로 장기 효과는 $0.471\times3.13\approx1.47$에 달한다(실질 소득 증가율 $100\times(\exp(1.47)-1)\approx93.6\%$).[3] 이는 동일한 거버넌스 개선이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의원내각제보다 훨씬 큰 장기 소득 프리미엄으로 누적됨을 의미한다.

이는 '가설 1'이 예측한 대로, 대통령제의 고정 임기와 장관 임명권이

3 장기 효과는 $\frac{1}{1-\beta_{L.gdp}}$로 계산되는 장기 승수(long-run multiplier)를 통해 추정된다.

제공하는 장기적 정치적 시간 지평(political time horizon)이 행정개혁, 공무원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성과 지연이 긴 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생존이 하원의 다수결에 좌우되므로 이러한 장기 투자가 단기 지역구 예산 배분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Persson and Tabellini, 2004). '가설 1'은 강력히 지지된다.

나. 가설 2(부패통제) 검증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s)에서 부패통제 1단위 개선은 소득을 31.1%p(100×(exp(0.271)-1)=31.1)에서 40.1%p 상승시키며,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m)는 21.7%p에서 28.1%p로 그 뒤를 잇는다. 의원내각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cs)는 14.6%p에서 20.0%p로 약한 효과를 보이지만,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cm)는 거의 무의미하다(부표 1~5 참조).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과 의회 다수파가 '부패 공동체'를 형성하여 감사원·검찰 독립, 입찰 투명화 등이 내각 불신임 위험으로 이어지지만, 대통령제는 분리된 생존 원리(separation of survival)와 예산 거부권으로 부패통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 일본 1955년 체제, 이탈리아 Tangentopoli, 영국 의원 경비 스캔들 등 역사적 사례가 이 메커니즘을 뒷받침한다. '가설 2'는 강력히 지지된다.

본 연구의 정부역량 지표 중 WGI 기반 변수는 원점수(−2.5 ~ +2.5)를 log(x + 2.5)로 변환한 값으로, 변환 후 1단위 상승은 원점수 기준 약 2.0~2.5점(전체 스케일의 40~50%)에 해당하는 극단적 개선이다. OECD 내 부패통제의 표준편차 0.245이므로, 1표준편차 개선(변환 후 약 0.25단위)은 반부패 제도 강화(예: 감사원 독립, 입찰 투명화)의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주요 계수(예: 0.337)는 1표준편차 기준으로 약 8.6%(β_sd=0.337 ×0.245≈0.083, exp(0.083)−1≈0.086, 8.6% 증가) 소득 상승으로 환산된다.

다. 가설 3(정치적 안정성) 검증

정치체제 6개 조합하에서 정치적 안정성의 조건부 효과는 체제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s)에서 정치적 안정성 1단위 개선은 18.2%p에서 22.4%p 소득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미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sm)는 오히려 -17.4%p에서 -19.5%p의 역효과를 보이며,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cm)도 약한 음의 경향을 보인다(부표 1~5 참조). 이는 '가설 3'을 초과 지지하는 결과로,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 교착, 조기 해산 등의 정치적 불안정이 빈번하나, 대통령제의 고정 임기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여 투자 위험 프리미엄을 낮춘다. 의원내각제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오히려 '정책 관성'과 '개혁 지연'으로 작동하여 성장에 독이 되는 역설이 최초로 실증되었다. '가설 3'은 매우 강력히 지지된다.

본 연구의 정부역량 지표 중 WGI 기반 변수는 원점수(−2.5 ~ +2.5)를 log(x + 2.5)로 변환한 값으로, 변환 후 1단위 상승은 원점수 기준 약 2.0~2.5점(전체 스케일의 40~50%)에 해당하는 극단적 개선이다. OECD 내 정치적 안정성의 표준편차 0.340으로 가장 크므로, 1표준편차 개선(변환 후 약 0.34단위)은 정치 충격 감소(예: 사회 통합 정책)의 현실적 효과를 반영한다. 주요 계수(예: 0.202)는 1표준편차 기준으로 약 7.1%(β_sd= 0.202×0.340≈0.069, exp(0.069)−1≈0.071, 7.1% 증가) 소득 상승으로 환산된다.

라. 가설 4(규제품질) 검증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s)에서 규제품질 1단위 개선은 소득을 3.9%p에서 5.4%p 상승시키며,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m)는 3.5%p에서 4.8%p로 유사하다.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cm)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다른 조합도 불안정하다(부

표 1~5 참조). 의원내각제에서는 규제 수혜자의 즉각적·집중적 손실이 내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개혁이 체계적으로 좌절된다. '가설 4'는 지지된다.

QoG 기반 변수는 원래 0~10 스케일(규제품질의 경우 평균 7.162, 표준편차 1.056)로, 1단위 개선은 시장규제 효율성의 상당한 향상이다.

마. 가설 5(법치주의) 검증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s)에서 법치주의 1단위 개선은 소득을 6.5%p에서 7.7%p 상승시키고,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pm)는 5.5%p에서 6.4%p로 뒤따른다. 의원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체제(cm)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며, 다른 조합도 약하다(부표 1~5 참조). 의원내각제에서는 사법부의 위헌 판단이 내각 생존을 직접 위협하므로 다수파가 사법부를 압박할 유인이 크지만, 대통령제는 고정 임기로 인해 사법 독립을 상대적으로 존중한다(Acemoglu *et al.*, 2005). '가설 5'는 지지된다.

QoG 기반 변수는 원래 0~10 스케일(법치주의 경우 평균 7.386, 표준편차 1.310)로, 1단위 개선은 사법 독립·재산권 보호의 큰 진전이다.

3. 정부형태

순수 대통령제(pre)하에서 정부 효과성은 31.4%p에서 41.3%p, 부패통제는 22.0%p에서 27.4%p, 규제품질은 4.1%p에서 5.1%p, 법치주의는 5.7%p에서 6.5%p의 소득 환산 효과를 보이며, 모든 지표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긍정 효과($p < 0.01 \sim 0.05$)를 나타낸다.[4] 반면, 세미대통령제

---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부역량 지표의 교차항 계수는 ln(GDP per capita)에 대한 값으로, 해당 지표가 변환 후 1단위 상승할 때 실질 소득수준이 $100\times(\exp(\beta)-1)\%$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WGI 기반 지표(ge, cc, ps)는 원점수(−2.5~+2.5)를 log(x+2.5)로 변환한 값이므로, 변환 후 1단위 상승은 원점수 기준으로 약 2.0~2.5점(전체 스케일 5점 중 40~50%)에 해당하는 극단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대규모 제도 개선을

<표 5-2> 정부형태 분석 결과

정부역량 / 정부형태	정부 효과성 (ge)	부패통제 (cc)	정치 안정성 (ps)	규제품질 (reg)	법치주의 (leg)
대통령제 (pre)	0.337**	0.242**	0.082*	0.046***	0.058***
	(0.142)	(0.104)	(0.044)	(0.012)	(0.018)
세미대통령제 (sem)	0.154	0.086	-0.090	0.028*	0.034*
	(0.162)	(0.126)	(0.067)	(0.015)	(0.019)
의원내각제 (par)	0.155	0.090	-0.087	0.028**	0.034*
	(0.160)	(0.118)	(0.062)	(0.014)	(0.018)

주: 1) 종속변수는 ln(gdp),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위 표는 <부표 6>~<부표 10>의 모형 (4)(연도 더미 + 전체 통제변수 + 1기 지연 종속변수 포함) 결과임. 전체 분석 결과는 <부표 6>~<부표 10>에 수록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sem)와 의원내각제(par)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거나 매우 약한 효과만을 보인다(부표 6~10 참조). 이는 고정 임기와 강한 집행권을 가진 순수 대통령제만이 정부역량을 경제 성과로 전환하는 데 최적임을 명확히 입증한다. 또한 대통령 직선제와 고정 임기가 제공하는 강한 정치적 인센티브와 책임성이 핵심임을 재확인한다.

4. 선거제도

소선거구제(smd)하에서 정부 효과성은 20.0%p에서 33.0%p, 부패통제는 17.5%p에서 23.9%p, 규제품질은 2.4%p에서 3.9%p, 법치주의는 3.9%p에서 5.6%p의 소득 환산 효과를 보이며, 대부분 유의미($p < 0.01 \sim 0.10$)하다.[5] 반면, 중대선거구제(mmd)는 모든 지표에서 유의하지 않거나 매우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소득 환산 효과 추정치는 제도 개선의 잠재적 상한을 보여주며, 정책 처방 시에는 표준편차 기준의 보수적 효과(대체로 5~15%p)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각주 4 참조.

<표 5-3> 선거제도 분석 결과

정부역량 / 정부형태	정부 효과성 (ge)	부패통제 (cc)	정치 안정성 (ps)	규제품질 (reg)	법치주의 (leg)
소선거구제 (smd)	0.235	0.203**	0.058	0.028	0.039*
	(0.160)	(0.094)	(0.048)	(0.017)	(0.022)
중대선거구제 (mmd)	0.147	0.108	-0.031	0.019	0.026
	(0.175)	(0.110)	(0.048)	(0.021)	(0.026)

주: 1) 종속변수는 ln(gdp),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위 표는 <부표 11>~<부표 15>의 모형 (4)(연도 더미 + 전체 통제변수 + 1기 지연 종속변수 포함) 결과임. 전체 분석 결과는 <부표 11>~<부표 15>에 수록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약한 효과만을 보인다(부표 11~15 참조). 이는 소선거구제가 정부역량의 경제적 가치를 증폭시키는 조절 변수로 작용하며, 단독으로는 약하나 대통령제와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함을 시사한다.

5. 권력분립/융합

삼권분립(sep)하에서 정부 효과성은 31.4%p에서 41.2%p, 부패통제는 22.0%p에서 28.1%p, 규제품질은 4.1%p에서 5.1%p, 법치주의는 5.7%p에서 6.4%p의 소득 환산 효과를 보이며, 모든 지표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긍정적 효과($p < 0.01 \sim 0.05$)를 나타낸다.[6] 반면, 권력융합(fus)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거나 매우 약한 효과만을 보인다(부표 16~20 참조). 이는 권력의 수평적 분산이 행정부의 전횡을 억제하면서도 장기적 정책 신뢰성을 높여 거버넌스의 경제적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각주 4 참조.

<표 5-4> 권력분립 분석 결과

정부역량 / 권력구조	정부 효과성 (ge)	부패통제 (cc)	정치 안정성 (ps)	규제품질 (reg)	법치주의 (leg)
삼권분립 (sep)	0.335**	0.248**	0.081*	0.046***	0.057***
	(0.144)	(0.105)	(0.044)	(0.012)	(0.019)
권력융합 (fus)	0.155	0.120	-0.086	0.028**	0.034*
	(0.160)	(0.122)	(0.060)	(0.014)	(0.019)

주: 1) 종속변수는 ln(gdp),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위 표는 <부표 16>~<부표 20>의 모형 (4)(연도 더미 + 전체 통제변수 + 1기 지연 종속변수 포함) 결과임. 전체 분석 결과는 <부표 16>~<부표 20>에 수록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제2절 정치제도와 정부역량

1. 정치제도가 정부역량 수준 자체에 미치는 영향

보조 분석에서는 정치체제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정부역량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Random-effects GLS 회귀를 수행하였다. 이는 정치체제가 시간 불변적 특성을 지니므로 고정효과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본 분석의 목적은 정치체제가 거버넌스 수준 자체에도 체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으며, 주 분석(조절효과)과 결합하여 메커니즘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조합 모델에서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ps)와 의원내각제 + 소선거구제(cs)는 각각 계수 0.109($p < 0.01$)와 0.100($p < 0.001$)으로 기준그룹(의원내각제 + 중대선거구제) 대비 유의하게 높은 정부 효과성을 보였다(표 5-5 참조). 반면, 세미대통령제 + 중대선거구제(sm)는 계수 -0.064($p < 0.05$)로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부형태 축에서는 순수 대통령제(pre)가 계수 0.059($p < 0.10$)로 의원내각제 대비 약하지만 긍정적 효과를

<표 5-5>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지표	모델	변수	계수	Robust SE	z	P>|z|
ge	조합	ps	0.109***	0.037	2.93	0.003
ge	조합	pm	-0.044	0.135	-0.33	0.744
ge	조합	ss	-0.036	0.033	-1.08	0.281
ge	조합	sm	-0.064**	0.029	-2.19	0.028
ge	조합	cs	0.100***	0.021	4.7	0
ge	정부형태	pre	0.059*	0.033	1.8	0.072
ge	정부형태	sem	-0.069**	0.025	-2.71	0.007
ge	선거제도	smd	0.065*	0.035	1.84	0.066
ge	권력구조	sep	0.071**	0.032	2.23	0.026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보였으나, 세미대통령제(sem)는 계수 -0.069($p < 0.01$)로 부정적이었다. 선거제도 축에서는 소선거구제(smd)가 계수 0.065($p < 0.10$)로 중대선거구제 대비 긍정적 영향을, 권력구조 축에서는 삼권분립(sep)이 계수 0.071($p < 0.05$)로 권력융합 대비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삼권분립이 행정역량 수준을 높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 모델에서는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ps), 세미대통령제 + 소선거구제(ss), 세미대통령제 + 중대선거구제(sm), 의원내각제 + 소선거구제(cs)가 각각 계수 0.133($p < 0.01$), 0.137($p < 0.001$), 0.072($p < 0.01$), 0.123($p < 0.001$)으로 기준 대비 유의하게 높은 부패통제 수준을 보였다(표 5-6 참조). 유일하게 대통령제 + 중대선거구제(pm)는 기준과 차이가 없었다. 정부형태 축에서는 순수 대통령제(pre)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세미대통령제(sem)는 계수 0.073($p < 0.01$)으로 긍정적이었다. 선거제도 축에서는 소선거구제(smd)가 계수 0.095($p < 0.001$)로 강한 긍정 효과를, 권력구조 축에서는 삼권분립(sep)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소선거구제가 부패통제 수준을 가장 일관되게 높이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모든 모델에서 정치체제 더미의 계수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표 5-6>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지표	모델	변수	계수	Robust SE	z	P>|z|
cc	조합	ps	0.133**	0.049	2.71	0.003
cc	조합	pm	0.101	0.288	0.35	0.744
cc	조합	ss	0.137***	0.025	5.49	0.281
cc	조합	sm	0.072**	0.024	3.03	0.028
cc	조합	cs	0.123***	0.013	9.44	0
cc	정부형태	pre	0.066	0.045	1.47	0.072
cc	정부형태	sem	0.073**	0.026	2.81	0.007
cc	선거제도	smd	0.095***	0.024	4.04	0.066
cc	권력구조	sep	0.053	0.044	1.21	0.026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표 5-7>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지표	모델	변수	계수	Robust SE	z	P>|z|
ps	조합	ps	-0.049	0.078	-0.62	0.003
ps	조합	pm	-0.36	0.496	-0.73	0.744
ps	조합	ss	0.067	0.044	1.52	0.281
ps	조합	sm	-0.029	0.034	-0.86	0.028
ps	조합	cs	0.001	0.042	0.01	0
ps	정부형태	pre	-0.059	0.064	-0.92	0.072
ps	정부형태	sem	0.003	0.026	0.1	0.007
ps	선거제도	smd	0.05	0.049	1.04	0.066
ps	권력구조	sep	-0.06	0.062	-0.96	0.026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않거나 기준 대비 약한 부정 효과를 보였다(표 5-7 참조). 이는 정치체제가 정치적 안정성 수준에 체계적 차이를 초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안정성 지표의 높은 변동성과 외생적 요인(예: 지정학적 충격)의 영

향이 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제도적 변수로는 안정성 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 모델에서 대통령제 기반 조합(ps: 1.584, $p < 0.001$; pm: 1.327, $p < 0.001$)과 의원내각제 + 소선거구제(cs: 0.491, $p < 0.001$)가 기준 대비 매우 높은 규제품질을 나타내었다(표 5-8 참조). 정부형태 축에서는 순수 대통령제(pre)가 계수 1.305($p < 0.001$)로 강한 긍정 효과를 보였으나 세미대통령제(sem)는 계수 -0.371($p < 0.10$)로 약한 부정 효과를 나타내었다. 선거제도 축에서는 소선거구제(smd)가 계수 0.483($p < 0.001$), 권력구조 축에서는 삼권분립(sep)이 계수 1.374($p < 0.001$)로 각각 강한 긍정 효과를 확인하였다.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이 규제품질 수준을 가장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조합 모델에서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ps)는 계수 0.638($p < 0.05$)로 기준 대비 높은 법치주의를 보였으나, 세미대통령제 조합(ss: -0.712, $p < 0.01$; sm: -1.072, $p < 0.001$)은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정부형태 축에서는 순수 대통령제(pre)가 계수 0.549($p < 0.05$)로 긍정적이었으나 세미대통령제(sem)는 계수 -0.987($p < 0.001$)로 강한 부정 효과를 보였다.

<표 5-8>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

지표	모델	변수	계수	Robust SE	z	P>|z|
reg	조합	ps	1.584***	0.191	8.3	0.003
reg	조합	pm	1.327***	0.387	3.43	0.744
reg	조합	ss	-0.002	0.201	-0.01	0.281
reg	조합	sm	-0.507**	0.188	-2.69	0.028
reg	조합	cs	0.491***	0.142	3.46	0
reg	정부형태	pre	1.305***	0.176	7.42	0.072
reg	정부형태	sem	-0.371*	0.222	-1.68	0.007
reg	선거제도	smd	0.483***	0.099	4.87	0.066
reg	권력구조	sep	1.374***	0.167	8.22	0.026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표 5-9> 법치주의(Rule of Law)

지표	모델	변수	계수	Robust SE	z	P>|z|
leg	조합	ps	0.638**	0.248	2.57	0.01
leg	조합	pm	0.376	0.969	0.39	0.698
leg	조합	ss	-0.712**	0.265	-2.69	0.007
leg	조합	sm	-1.072***	0.255	-4.2	0
leg	조합	cs	0.1	0.209	0.48	0.632
leg	정부형태	pre	0.549**	0.247	2.22	0.026
leg	정부형태	sem	-0.987***	0.307	-3.21	0.001
leg	선거제도	smd	0.191	0.139	1.38	0.169
leg	권력구조	sep	0.731***	0.238	3.07	0.002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선거제도 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권력구조 축에서는 삼권분립(sep)이 계수 0.731($p < 0.01$)로 긍정적이었다(표 5-9 참조).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은 법치주의 수준을 높이는 반면, 세미대통령제는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순수 대통령제(pre)와 삼권분립(sep)은 대부분의 정부역량 지표(특히 규제품질, 법치주의, 정부 효과성) 수준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며, 소선거구제(smd)도 규제품질과 부패통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정치적 안정성은 제도적 차이에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주 분석의 조절효과(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 차이)를 보완하여, 대통령제 중심 체제가 거버넌스 수준 자체를 제고하고 그 개선의 경제적 수익률을 동시에 극대화한다는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다만, 역사적 유산(esp_colony, former_ussr)의 지속적인 부정 효과는 제도 성과의 이종성(heterogeneity)을 강조한다.

2. 정치제도와 장기 소득수준

앞서 분석한 System GMM 모델들은 정치체제 변수가 더미이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는데, 내생성 완화를 위해 정치체제별 거버넌스 지표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aible biases)를 잠시 무시하고 정치체제와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GLS)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표 5-10> 정치제도와 소득수준: Random Effects GLS

모델	변수 설명	변수명	계수	Robust SE	z-value	p-value	실질효과(%)
조합	대통령제+소선거구제	ps	0.555***	0.129	4.29	0	74.1
조합	대통령제+중대선거구제	pm	0.278*	0.151	1.84	0.066	32
조합	세미대통령제+소선거구제	ss	0.008	0.144	0.06	0.954	-
조합	세미대통령제+중대선거구제	sm	-0.461***	0.156	-2.96	0.003	-36.9
조합	의원내각제+소선거구제	cs	0.054	0.133	0.4	0.686	-
조합	의원내각제+중대선거구제	cm	omitted	-	-	-	-
정부형태	순수 대통령제	pre	0.442***	0.093	4.77	0	55.6
정부형태	세미대통령제	sem	0.001	0.069	0.01	0.99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par	omitted	-	-	-	-
선거제도	소선거구제	smd	0.188**	0.093	2.02	0.043	20.7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	pro	omitted	-	-	-	-
권력구조	삼권분립	sep	0.441***	0.096	4.57	0	55.4
권력구조	권력융합	fus	omitted	-	-	-	-

주: 1) 종속변수는 ln(gdp),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모델별 기준 그룹은 omitted 변수임. 실질 효과는 $100\times(\exp(\beta)-1)\%$로 계산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제3절 이론적 · 정책적 함의

1. 인과 기제의 체계적 분해

본 연구의 System GMM 분석은 정치체제의 장기 경제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고, 정부역량을 통한 중재적·조절적 경로로 누적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통령제+소선거구제(ps)와 순수 대통령제(pre), 삼권분립(sep) 체제가 정부역량 5개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소득 환산 효과를 보인다. 특히 정부 효과성과 부패통제는 30%p 이상, 법치주의와 규제품질은 4~7%p 이상의 소득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의원내각제+중대선거구제 체제(cm)의 거의 무의미한 효과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둘째, 소선거구제(smd)는 단독으로는 약한 효과를 보이지만, 대통령제와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이는 선거규칙이 독립적 요인이 아니라 정부형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함을 입증한다. 셋째, 의원내각제+중대선거구제 체제(cm)는 정부역량 개선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적 함정'에 빠져 있으며, 이는 권력 집중과 다당제 분열이 정책 일관성과 투자 유인을 저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가설 1~5는 강력히 지지된다. 대통령제하에서 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규제품질, 법치주의의 소득 환산 효과가 의원내각제보다 월등히 크며, 정치적 안정성도 대통령제+소선거구제 조합(ps)에서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전체 결과를 통합하면 대통령제+소선거구제+삼권분립의 결합이 모든 거버넌스 지표에서 압도적인 환산 효과를 보이는 반면, 의원내각제+중대선거구제+권력융합은 사실상 '제도적 함정(institutional trap)'에 빠져 거버넌스 개선이 장기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다.

2. 이론적 ·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비교정치경제학의 실증적 경계선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기여를 이루었다. 정치체제의 경제적 성과는 단순 민주주의 여부가 아닌, 제도 조합의 정밀한 설계와 정부역량의 중재적 역할에 달려 있음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 삼권분립의 결합은 정부역량 1단위 개선을 소득 30~47%p(실질 증가율 약 35~60%) 상승으로 전환하는 최적의 제도적 설계로 평가된다. 가설 1~5는 모두 강력히 지지되었으며, 특히 '가설 3'의 역효과 발견은 기존 문헌에 없던 새로운 통찰이다.

정책적으로, OECD 국가들은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중대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권력융합 → 삼권분립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해 장기 경제안보를 20~40% 이상 제고할 잠재력을 가진다. 특히 현재 의원내각제 국가는 거버넌스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체제 전환 없이는 성장의 정체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는 거버넌스 강화가 장기 성장의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분석은 정치체제가 정부역량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조절자임을 입증하였으며,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조합(ps)과 삼권분립 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인과 기제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제도 공학의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며, 경제안보를 위한 제도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과 요약

본 연구는 OECD 38개국(1991~2023년, 최대 1,048개 관측치)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체제의 미시적 조합(정부형태, 선거규칙, 권력구조)이 정부역량을 통해 장기 경제발전 수준(ln GDP per capita)에 미치는 인과적 기제를 동적 패널분석으로 규명하였다. 결과는 기존의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완전히 넘어선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시장 개방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국가 통제를 넘어, 민주적 제도 내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이 경제안보의 핵심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의원내각제의 '내각 생존 제약(survival constraint of the cabinet)'은 정부 효과성, 부패통제, 규제품질, 법치주의 등 장기적, 분산적 편익을 가져오는 거버넌스 개선을 체계적으로 저해한다. 정치적 보상이 지연되고 비용이 즉각적,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각은 단기 표심에 유리한 지역 예산 쪼개기・보조금・포퓰리즘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반면, 대통령제의 '생존 분리(separation of survival)'와 고정 임기는 정치적 시간 지평을 8~1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동일한 거버넌스 1단위 개선을 소득수준의 최대 47%p 상승이라는 압도적 프리미엄(실질 소득 약 60% 증가)으로

전환한다. 특히 정치적 안정성은 체제에 따라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은 본 연구가 OECD 고소득국 패널에서 System GMM으로 가장 명확히 입증한 결과이다.

핵심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및 삼권분립 체제는 정부역량 개선 시 소득수준을 상승시키는 최고의 환산 효율을 보인다. 둘째, 의원내각제 + 중대선거구제 체제는 거버넌스 개선이 경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 셋째, 소선거구제는 단독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대통령제와 결합 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 넷째, 순수 대통령제는 정부역량 → 경제안보 전환의 핵심 동력이며, 권력융합은 효과가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경제안보 성능을 실증적으로 재정립하며, 다음 위기를 대비한 민주적 제도 공학의 실증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제도 설계 원칙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정치체제가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을 조절한다는 조건부 효과를 주로 보여주며, 이는 대통령제 중심 체제가 장기적 거버넌스 개선의 정치적 유인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가 직접 입증하지 않으나, 이론적 메커니즘(Persson and Tabellini, 2004a; 2004b)과 보조 분석을 종합할 때 대통령제 중심 체제가 정부역량의 경제적 환산 효율을 높이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제(특히 중임제)의 고정 임기와 재선 유인은 장기적 행정개혁(공무원 역량 강화, 디지털 정부 전환, 성과 중심 인사·승진 체계)을 정치적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정부 효과성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질'과 '공무원 역량'을 강화한다. 삼권분립과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의 포획된 규제(지역 특혜 예산)를 차단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여 규제품질의 '시장 진입·퇴출 규제 효율성'을 제고한다. 상향식 공천은 정당 지도부의 공천권 남용을 억제하고 의원의 충성 대상을 중위유권자로

이동시켜 반부패 기관(감사원, 검찰)의 독립적 운영과 투명한 공공 조달을 촉진하여 부패통제를 강화한다. 권력분립은 사법부의 정치적 압박을 줄이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치주의의 '재산권 보호'와 '계약 집행 품질'을 개선한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환산 효율 우위는 제도 변경만으로 자동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보완 조건이 필수적이다: (i) 정책 지속성에 대한 시장·투자자의 안정적 기대 형성, (ii) 규제기관과 반부패 기관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iii)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 예측 가능성 제고, (iv) 재정 운영의 엄격한 규율과 성과평가 체계 구축. 대통령제 중심 체제는 이러한 조건을 형성할 정치적 유인을 강화하나, 제도 이행 능력과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다음의 제안은 실증 결과에 기반한 저자의 정책적 함의로, 직접적 실증분석 결과는 아니며 가능한 제도 설계의 예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그룹(예컨대, 미국, 칠레, 멕시코)[7]은 단순히 정부형태뿐만 아니라, 대부분 '4년 중임제'와 '예비선거(Primary) 등 상향식 공천'이라는 제도적 기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실증분석의 '대통령제 + 소선거구제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형태 변화를 넘어, 고성과 국가의 세부적인 작동 기제(상향식 공천과 4년 중임제)와 같은 장기적 시야를 제공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제의 경제안보 우위는 하향식 공천제도와 단임제(single non-renewable term)의 이중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치적, 정

---

7 본 연구는 특정 국가를 '모범 국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조합의 평균적인 효율성'을 분석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칠레나 멕시코는 정치체제(대통령제 +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효율성이 높았으나, 사회경제적 요인(불평등 심화)이나 정치 엘리트의 행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스페인 식민지 경험이라는 변수를 통해 충분히 통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자체의 잠재적 효율성을 다루며, 이 효율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시적 혹은 행태적 요인의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책적 불안정성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도(bottom-up nomination)는 정치인의 활동 목표를 중위투표자의 효용 극대화로 유도한다. 상향식 공천에서는 하향식 공천에서 정치인이 당 지도부를 향해 노력할 때보다 높은 입법 생산성—법안 제출 증가, 설득 노력 강화, 법안 통과율 상승—을 초래한다. 나아가 정당 조직의 민주화, 입법부의 정당 지도부 예속으로부터 독립, 정당 간 타협·합의 유인을 강화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통령제에서 탄핵은 경직성을 보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safety valve)이지만, 공천권이 하향식으로 집중된 구조에서는 정략적 의도에 의해 남용될 잠재적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상향식 공천은 대통령-당 지도부 간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단임제는 정치적 시야(political horizon)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대통령을 '레임덕이 예정된 관리자'로 전락시키며 정부역량 강화, 법치주의 심화, 규제품질 제고와 같은 장기 개혁 과제를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정책 불연속성, 투자 불확실성, 시장 신뢰 하락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경제안보를 직접 훼손한다.

역사적 사례는 4년 중임제(4-year renewable term)의 장기 개혁 유인과 분점정부 극복 효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1789년~현재)의 경우, 4년 중임제와 2년 주기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는 재선 유인으로 장기 인프라 투자(New Deal, Interstate Highway System, CHIPS Act)와 제도 개혁(Social Security, Civil Rights Act), 기술 혁신(Apollo, Internet)을 지속하게 했다. 여소야대에서도 중간선거가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유도하여 분점정부의 교착(gridlock)을 협상 기회로 전환했다.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 중임제 대통령제 국가는 단임제 국가(한국, 페루 등)보다 훨씬 높은 정책 연속성과 거버넌스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한국(1987년~현재)의 5년 단임제는 장기 개혁의 정치적 동기 부족으로 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이 임기 말 포퓰리즘에 밀려 좌초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경제안보 완성의 제도적 삼위일체는

중임제의 장기 시야, 상향식 공천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대통령제의 강력한 집행력을 핵심 동력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거버넌스 투자의 경제적 환산 효율이 극대화되며, 지속 가능한 경제안보 체제가 완성된다.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선 유인으로 장기 개혁(정부 효과성, 법치주의, 규제품질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고 분점정부로 인한 입법 마비를 여야협상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선과 2년 시차를 두는 중간선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당내 민주화와 입법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개혁의 성공 여부는 누가 개정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직 대통령, 현직 국회의원, 현직 정당 대표 등 현 제도의 최대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가 개정 과정에 참여하면 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현 권력자는 자신의 재선 확률을 극대화하거나 퇴임 후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만 헌법을 설계한다. 한국의 1987년 체제 역시 직선제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도 단임제 유지, 하향식 공천권 강화, 권력구조 불균형을 그대로 둔 전형적인 '현직 주도의 헌법 설계'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37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구조적 결함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Persson, Roland, and Tabellini(2000)에 따르면, 헌법 규칙을 설계하는 단계에 현직 대리인(정치인)이 참여할 경우, 이들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보다 자신의 지대(rent)와 재선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왜곡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직 배제'와 '시민 참여'는 단순한 민주적 당위성이 아니라, 대리인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최적의 제도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경제학적 필수 조건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워싱턴-베이징 양극단 이후의 세계를 대비한 민주적 제도 공학의 실증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4년 중임제, 상향식 공천, 그리고 중간선거는 대통령제의 경제안보 성능을 장기적 시야와 정치적 안정성으로 완성하는 결정적 제도적 삼위일체(institutional trinity)로서, 다가올

위기에 내생적 회복력을 갖춘 민주적 경제안보 체제의 핵심 설계 원칙이 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OECD라는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 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낮은 정부역량 수준을 가진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법치와 부패 통제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정치체제의 미시적 조합뿐만 아니라 제도적 설계의 미세 조정을 통한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 기초가 이미 구축된 환경에서 어떤 제도적 설계의 미세 조정이 효율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뿐이다. 이 결과를 거버넌스 품질이 낮은 비OECD 개발도상국이나 취약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대통령제/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약적인 해석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도 형식 자체보다 기본적인 국가 건설과 제도 이행 능력이 더 큰 제약 요인일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제도의 경직성이 높고,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등의 근본적인 체제 변화 사례가 매우 드물다. 이는 분석 대상 내 제도적 이질성(institutional heterogeneity)을 낮추는 요인이 되며, 정치체제 자체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가 제도와 거버넌스 지표 간의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우회하기 위함이다.

OECD 국가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므로,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적 성과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지 않는다. 중국과 같은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보이는 특정 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장기 계획 집행력 같은 잠재적 장점을 포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언은 민주적

제도적 틀 안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 환경이 우수한 국가들이 자신의 정치체제를 미세 조정하여 거버넌스 투자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 대한 강력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Acemoglu, D., S. Johnson, and J. Robinson, “Institutions as a Fundamental Cause of Long-Run Growth,”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 1A, 2005.

Acemoglu, D., S. Naidu, P. Restrepo, and J. A. Robinson, “Democracy Does Cause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1), 2019, pp.47~100.

Arter, D., *Scandinavian Politics Toda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8.

Bagehot, Walter, *The English Constitution*, London: Chapman and Hall, 1867.

Barro, Robert J., “Democracy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 1996, pp.1~27.

Bergman, T., “Formation Rules and Minority Governmen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23, No. 1, 1993, pp.55~66.

Cameron, Charles M., *Veto Bargaining: Presidents and the Politics of Negative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Cheibub, José Antonio.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Chen, W. (Ed.),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 Has Changed Western Ideas of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Cox, Gary W.,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Dewatripont, M., and G. Roland, “The Virtues of Gradualism and Legitimacy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e Economic Journal*, Vol. 102, No. 411, 1992, pp.291~300.

Fey, Mark, “Duverger's Law Without Strategic Vot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Rochester, 2007.

Fiorina, Morris P., *Divided Government(2nd ed.)*, Boston: Longman, 1996.

Fish, M. S., *Democracy Derailed in Russia: The Failure of Open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Gerring, John, Strom C. Thacker, and Carola Moreno, “Are Parliamentary Systems Bette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3), 2009, pp.327~359.

Gradstein, Mark, “Institutional Traps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9, No. 3, 2008, pp.1043~1066.

Haggard, Stephan and Mathew D. McCubbins (eds.), *Presidents, Parliaments, and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Halper, S.,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Basic Books, 2010.

Knutsen, Carl Henrik, “Democracy, Dictatorship, and Technological Adop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reen Revolu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4, No. 8, 2011, pp.1015~1046.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No. 6, 1998, pp.1113~1155.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2012.

Linz, Juan J.,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 No. 1, 1990, pp.51~69.

Linz, J. J. and A.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Madison, James, “"Federalist No. 51: Th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Must Furnish the Proper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Different Departments,” *The Federalist Papers*, 1788.

Mainwaring, Scott and Matthew Shugart, “Conclusion: Presidentialism and the Party System.” Chapter. In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394~439.

Mayhew, David R.,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s, 1946-199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Mauro, Paolo,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1995, pp.681~712.

_____, “The Persistence of Corruption and Slow Economic Growth,” *IMF Staff Papers*, Vol. 51, No.1, 2004, pp.1~18.

McManus, Richard and F. Gulcin Ozkan, “Who does Better for the Economy? Presidents versus Parliamentary Democracies,” *Public Choice*, Vol. 176, 2018, pp.361~387.

Milesi-Ferretti, G. M., R. Perotti, and M. Rostagno, “Electoral Systems and Public Spend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2), 2002, pp.609~657.

Mill, John Stuart,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London: Parker, Son, and Bourn, 1861.

Montesquieu, *The Spirit of the Law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Negretto, G. L., *Making Constitutions: Presidents, Parties, and Institutional Choice in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North, D. C. and R. P. Thomas,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Osborne, Martin J. and AI Slivinski, “A Model of Political Competition with Citizen-Candid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1, 1996, pp.65~96.

Palfrey, Thomas R., “A Mathematical Proof of Duverger's Law,” *Models of Strategic Choice in Politics*, edited by Peter C. Ordeshook,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9, pp.69~91.

Persson, Torsten and Guido Tabellini, “The Size and Scope of Government: Comparative Politics with Rational Politician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3, No. 4-6, 1999, pp.699~735.

_____, *Political Economics: Explaining Economic Policy*, The MIT Press, 2000.

_____, *The Economic Effects of Constitutions*, The MIT Press, 2003.

_____, “Constitutional Rules and Fiscal Policy Out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1, 2004a, pp.25~45.

_____, “Constitutions and Economic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8, No. 1, 2004b, pp.75~98.

Persson, Torsten, Gerard Roland, and Guido Tabellini, “Comparative Politics and Public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8, No. 6, 2000, pp.1121~1161.

_____, “Electoral Rules and Government Spending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7, pp.1~34.

Ramo, J. C., *The Beijing Consensus: Notes on the New Physics of Chinese Power*,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Roland, G.,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2002, pp.29~50.

Roodman, David, “How to Do xtabond2: An Introduction to Difference and System GMM in Stata,” *Stata Journal*, 9(1), 2009a, pp.86~136.

Roodman, David, “A Note on the Theme of Too Many Instrument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1), 2009b, pp.135~158.

Strøm, K., *Minority Government and Majority Ru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Tanzi, Vito,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MF Staff Papers, Vol. 45, No. 4, 1998, pp559~594.

Tavares, José and Romain Wacziarg, “How Democracy Affects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No. 8, 2001, pp.1341~1378.

Tirole, Jean, “Hierarchies and Bureaucracies: On the Role of Collusion in Organization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Vol. 2, No. 2, 1986, pp.181~214.

Williamson, J., “What Washington Means by Policy Reform,” In *Latin American 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pp.7~20.

<웹사이트 및 자료>

외교부(접속일: 2025. 9. 18).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부 록

<부표 1>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80***	0.687***	0.680***	0.599***
	(0.066)	(0.055)	(0.124)	(0.108)
ps_ge	0.447***	0.368***	0.403***	0.471***
	(0.119)	(0.116)	(0.137)	(0.157)
pm_ge	0.444***	0.362***	0.398**	0.457***
	(0.147)	(0.138)	(0.159)	(0.172)
ss_ge	0.264**	0.141	0.202	0.235
	(0.120)	(0.110)	(0.151)	(0.157)
sm_ge	0.170	0.067	0.107	0.106
	(0.171)	(0.152)	(0.222)	(0.205)
cs_ge	0.304***	0.198**	0.249*	0.283*
	(0.105)	(0.101)	(0.147)	(0.155)
cm_ge	0.190	0.061	0.116	0.162
	(0.129)	(0.118)	(0.157)	(0.157)
esp_colony	-0.292***	-0.329***	-0.325**	-0.355***
	(0.094)	(0.077)	(0.151)	(0.131)
former_ussr	-0.218***	-0.257***	-0.236**	-0.271***
	(0.048)	(0.068)	(0.104)	(0.100)
legor_sc	0.168***	0.194***	0.166**	0.170***
	(0.062)	(0.061)	(0.069)	(0.062)
trd	0.004***	0.004***	0.004***	0.004***
	(0.001)	(0.001)	(0.001)	(0.001)
inflat		-0.005***	-0.007**	-0.008***
		(0.001)	(0.003)	(0.002)
lnfdiin			0.001	0.002
			(0.005)	(0.005)
oil_rent			0.008**	0.010***
			(0.003)	(0.003)
aging				0.001
				(0.001)
cons	2.793***	2.824***	2.853**	3.593***
	(0.770)	(0.620)	(1.404)	(1.143)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year	1996~2023	1996~2023	1996~2021	1996~2021
country	38	38	30~38	30~38

주: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2>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74***	0.691***	0.666***	0.598***
	(0.065)	(0.053)	(0.110)	(0.092)
ps_cc	0.300***	0.271***	0.285***	0.337***
	(0.108)	(0.094)	(0.090)	(0.110)
pm_cc	0.219*	0.196**	0.216**	0.248**
	(0.119)	(0.099)	(0.091)	(0.104)
ss_cc	0.159*	0.078	0.105	0.132
	(0.093)	(0.088)	(0.093)	(0.100)
sm_cc	0.028	-0.011	-0.020	-0.025
	(0.136)	(0.124)	(0.143)	(0.135)
cs_cc	0.200**	0.136*	0.161*	0.182**
	(0.084)	(0.078)	(0.085)	(0.091)
cm_cc	0.083	-0.004	0.017	0.057
	(0.093)	(0.093)	(0.100)	(0.103)
esp_colony	-0.252**	-0.274***	-0.313***	-0.330***
	(0.110)	(0.088)	(0.121)	(0.107)
former_ussr	-0.212***	-0.252***	-0.247***	-0.269***
	(0.050)	(0.070)	(0.095)	(0.089)
legor_sc	0.174***	0.202***	0.177***	0.172***
	(0.056)	(0.063)	(0.066)	(0.063)
trd	0.003***	0.004***	0.004***	0.004***
	(0.001)	(0.001)	(0.001)	(0.001)
inflat		-0.005***	-0.008**	-0.008***
		(0.001)	(0.003)	(0.002)
lnfdiin			0.001	0.001
			(0.004)	(0.004)
oil_rent			0.012**	0.013**
			(0.005)	(0.005)
aging				0.001
				(0.001)
cons	3.022***	2.884***	3.136***	3.774***
	(0.729)	(0.590)	(1.206)	(0.945)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year	1996~2023	1996~2023	1996~2021	1996~2021
country	38	38	30~38	30~38

주: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3>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80***	0.684***	0.665***	0.610***
	(0.069)	(0.068)	(0.094)	(0.098)
ps_ps	0.196***	0.167***	0.173**	0.202**
	(0.069)	(0.059)	(0.079)	(0.089)
pm_ps	0.039	0.026	0.044	0.056
	(0.034)	(0.028)	(0.040)	(0.038)
ss_ps	0.006	-0.063	-0.053	-0.061
	(0.066)	(0.060)	(0.071)	(0.057)
sm_ps	-0.149*	-0.191***	-0.189***	-0.217***
	(0.082)	(0.054)	(0.054)	(0.055)
cs_ps	0.050	-0.001	0.013	0.003
	(0.065)	(0.048)	(0.070)	(0.068)
cm_ps	-0.063	-0.142**	-0.132	-0.119*
	(0.062)	(0.063)	(0.089)	(0.069)
esp_colony	-0.284***	-0.314***	-0.342***	-0.365***
	(0.099)	(0.073)	(0.092)	(0.094)
former_ussr	-0.228***	-0.243***	-0.251**	-0.271***
	(0.062)	(0.088)	(0.105)	(0.102)
legor_sc	0.187***	0.211***	0.191***	0.190***
	(0.054)	(0.063)	(0.066)	(0.063)
trd	0.003***	0.004***	0.004**	0.004***
	(0.001)	(0.001)	(0.002)	(0.001)
inflat		-0.005***	-0.008**	-0.007***
		(0.002)	(0.003)	(0.002)
lnfdiin			0.002	0.002
			(0.005)	(0.005)
oil_rent			0.010*	0.012*
			(0.006)	(0.006)
aging				0.001
				(0.001)
cons	3.168***	3.160***	3.352***	3.897***
	(0.731)	(0.674)	(0.940)	(0.948)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year	1996~2023	1996~2023	1996~2021	1996~2021
country	38	38	30~38	30~38

주: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4>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94***	0.694***	0.685***	0.669***
	(0.051)	(0.055)	(0.076)	(0.082)
ps_reg	0.054***	0.039***	0.043**	0.043***
	(0.011)	(0.012)	(0.019)	(0.016)
pm_reg	0.048***	0.035***	0.038**	0.038**
	(0.011)	(0.012)	(0.018)	(0.016)
ss_reg	0.030**	0.003	0.024	0.019
	(0.013)	(0.017)	(0.031)	(0.024)
sm_reg	0.008	-0.016	0.002	-0.003
	(0.016)	(0.020)	(0.030)	(0.027)
cs_reg	0.032**	0.010	0.026	0.023
	(0.013)	(0.014)	(0.024)	(0.019)
cm_reg	0.021	-0.009	0.019	0.014
	(0.014)	(0.018)	(0.037)	(0.029)
esp_colony	-0.330***	-0.382***	-0.313***	-0.335***
	(0.066)	(0.083)	(0.102)	(0.105)
former_ussr	-0.206***	-0.245***	-0.157**	-0.183**
	(0.054)	(0.076)	(0.080)	(0.080)
legor_sc	0.150***	0.189***	0.103	0.114*
	(0.056)	(0.063)	(0.075)	(0.068)
trd	0.003***	0.004***	0.002	0.002*
	(0.000)	(0.001)	(0.002)	(0.001)
inflat		-0.005***	-0.009***	-0.008***
		(0.001)	(0.003)	(0.002)
lnfdiin			0.002	0.003
			(0.005)	(0.005)
oil_rent			0.007	0.008
			(0.007)	(0.006)
aging				0.000
				(0.000)
cons	2.844***	2.944***	3.077***	3.217***
	(0.539)	(0.597)	(0.787)	(0.865)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year	1995~2022	1995~2022	1995~2021	1995~2021
country	38	38	30~38	30~38

주: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5>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59***	0.679***	0.706***	0.653***
	(0.051)	(0.050)	(0.106)	(0.095)
ps_leg	0.077***	0.065***	0.053**	0.064**
	(0.016)	(0.018)	(0.023)	(0.025)
pm_leg	0.064***	0.055***	0.043**	0.051**
	(0.018)	(0.018)	(0.021)	(0.023)
ss_leg	0.052***	0.031	0.020	0.032
	(0.017)	(0.020)	(0.033)	(0.027)
sm_leg	0.031	0.016	0.006	0.014
	(0.020)	(0.025)	(0.034)	(0.033)
cs_leg	0.055***	0.038**	0.028	0.038
	(0.016)	(0.018)	(0.026)	(0.024)
cm_leg	0.043**	0.020	0.007	0.021
	(0.018)	(0.022)	(0.039)	(0.030)
esp_colony	-0.239***	-0.272***	-0.275**	-0.272**
	(0.073)	(0.083)	(0.109)	(0.106)
former_ussr	-0.212***	-0.249***	-0.211**	-0.222**
	(0.055)	(0.065)	(0.107)	(0.088)
legor_sc	0.114*	0.158**	0.167	0.136*
	(0.060)	(0.073)	(0.106)	(0.077)
trd	0.003***	0.004***	0.004*	0.003**
	(0.000)	(0.001)	(0.002)	(0.001)
inflat		-0.006***	-0.007	-0.008**
		(0.001)	(0.006)	(0.003)
lnfdiin			0.001	0.001
			(0.004)	(0.004)
oil_rent			0.008*	0.010**
			(0.005)	(0.004)
aging				0.000
				(0.001)
cons	3.020***	2.887***	2.713**	3.185***
	(0.520)	(0.528)	(1.156)	(0.985)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year	1995~2022	1995~2022	1995~2021	1995~2021
country	38	38	30~38	30~38

주: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6> 정부형태: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1***	0.754***	0.741***	0.685***
	(0.037)	(0.035)	(0.104)	(0.086)
pre_ge	0.346***	0.273***	0.299**	0.337**
	(0.103)	(0.101)	(0.135)	(0.142)
sem_ge	0.182*	0.089	0.141	0.154
	(0.101)	(0.091)	(0.155)	(0.162)
par_ge	0.179*	0.088	0.135	0.155
	(0.101)	(0.090)	(0.151)	(0.160)
esp_colony	-0.268***	-0.274***	-0.276**	-0.305**
	(0.066)	(0.057)	(0.124)	(0.121)
former_ussr	-0.221***	-0.239***	-0.222**	-0.237**
	(0.049)	(0.075)	(0.097)	(0.108)
legor_sc	0.056	0.058	0.038	0.050
	(0.037)	(0.039)	(0.049)	(0.054)
trd	0.003***	0.004***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inflat		-0.004***	-0.007**	-0.007***
		(0.001)	(0.003)	(0.003)
lnfdiin			0.003	0.004
			(0.005)	(0.005)
oil_rent			0.008**	0.009***
			(0.004)	(0.003)
aging				0.001
				(0.000)
cons	2.395***	2.254***	2.364**	2.890***
	(0.429)	(0.383)	(1.160)	(0.980)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7> 정부형태: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6***	0.760***	0.723***	0.678***
	(0.043)	(0.035)	(0.110)	(0.087)
pre_cc	0.227**	0.199**	0.218**	0.242**
	(0.098)	(0.079)	(0.092)	(0.104)
sem_cc	0.103	0.042	0.087	0.086
	(0.082)	(0.072)	(0.118)	(0.126)
par_cc	0.097	0.042	0.085	0.090
	(0.080)	(0.069)	(0.111)	(0.118)
esp_colony	-0.244***	-0.247***	-0.279**	-0.304***
	(0.083)	(0.062)	(0.109)	(0.107)
former_ussr	-0.205***	-0.231***	-0.215**	-0.230**
	(0.059)	(0.078)	(0.102)	(0.107)
legor_sc	0.056	0.059	0.033	0.045
	(0.040)	(0.041)	(0.049)	(0.052)
trd	0.003***	0.003***	0.003*	0.003**
	(0.001)	(0.001)	(0.002)	(0.001)
inflat		-0.004***	-0.008**	-0.008***
		(0.001)	(0.004)	(0.003)
lnfdiin			0.003	0.003
			(0.005)	(0.005)
oil_rent			0.012*	0.013*
			(0.007)	(0.007)
aging				0.000
				(0.000)
cons	2.474***	2.265***	2.646**	3.081***
	(0.496)	(0.378)	(1.199)	(0.940)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8> 정부형태: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7***	0.754***	0.734***	0.697***
	(0.056)	(0.047)	(0.082)	(0.070)
pre_ps	0.095*	0.076*	0.070	0.082*
	(0.051)	(0.046)	(0.045)	(0.044)
sem_ps	-0.023	-0.074	-0.067	-0.090
	(0.069)	(0.060)	(0.086)	(0.067)
par_ps	-0.033	-0.073	-0.072	-0.087
	(0.059)	(0.046)	(0.074)	(0.062)
esp_colony	-0.266***	-0.267***	-0.302***	-0.315***
	(0.099)	(0.066)	(0.079)	(0.072)
former_ussr	-0.202**	-0.213**	-0.212**	-0.222**
	(0.080)	(0.086)	(0.105)	(0.099)
legor_sc	0.088**	0.083*	0.074	0.092*
	(0.044)	(0.044)	(0.053)	(0.055)
trd	0.003***	0.003***	0.003*	0.003**
	(0.001)	(0.001)	(0.002)	(0.001)
inflat		-0.004***	-0.007**	-0.007***
		(0.002)	(0.003)	(0.002)
lnfdiin			0.003	0.003
			(0.006)	(0.005)
oil_rent			0.008	0.009*
			(0.005)	(0.005)
aging				0.001
				(0.001)
cons	2.644***	2.499***	2.729***	3.084***
	(0.613)	(0.481)	(0.877)	(0.715)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9> 정부형태: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2***	0.750***	0.702***	0.705***
	(0.033)	(0.034)	(0.073)	(0.067)
pre_reg	0.051***	0.041***	0.046***	0.046***
	(0.010)	(0.010)	(0.013)	(0.012)
sem_reg	0.028**	0.011	0.031*	0.028*
	(0.013)	(0.014)	(0.017)	(0.015)
par_reg	0.027**	0.011	0.030*	0.028**
	(0.012)	(0.013)	(0.017)	(0.014)
esp_colony	-0.306***	-0.313***	-0.287***	-0.290***
	(0.050)	(0.055)	(0.065)	(0.064)
former_ussr	-0.212***	-0.243***	-0.153**	-0.170**
	(0.046)	(0.063)	(0.070)	(0.077)
legor_sc	0.077*	0.071*	0.061*	0.056
	(0.040)	(0.039)	(0.036)	(0.036)
trd	0.003***	0.003***	0.002*	0.002*
	(0.000)	(0.001)	(0.001)	(0.001)
inflat		-0.005***	-0.010***	-0.009***
		(0.001)	(0.003)	(0.003)
lnfdiin			0.003	0.004
			(0.005)	(0.005)
oil_rent			0.008	0.008*
			(0.006)	(0.005)
aging				0.000
				(0.000)
cons	2.458***	2.330***	2.871***	2.811***
	(0.357)	(0.355)	(0.754)	(0.715)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0> 정부형태: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06***	0.735***	0.714***	0.704***
	(0.037)	(0.036)	(0.116)	(0.079)
pre_leg	0.065***	0.057***	0.053**	0.058***
	(0.015)	(0.015)	(0.020)	(0.018)
sem_leg	0.041**	0.026	0.033	0.034*
	(0.016)	(0.016)	(0.026)	(0.019)
par_leg	0.040***	0.027*	0.032	0.034*
	(0.016)	(0.016)	(0.025)	(0.018)
esp_colony	-0.241***	-0.247***	-0.227***	-0.229***
	(0.063)	(0.056)	(0.077)	(0.075)
former_ussr	-0.213***	-0.246***	-0.159*	-0.183*
	(0.046)	(0.052)	(0.093)	(0.096)
legor_sc	0.039	0.043	0.031	0.026
	(0.040)	(0.044)	(0.035)	(0.039)
trd	0.003***	0.004***	0.002	0.002*
	(0.000)	(0.001)	(0.002)	(0.001)
inflat		-0.005***	-0.010*	-0.009**
		(0.001)	(0.006)	(0.004)
lnfdiin			0.002	0.002
			(0.005)	(0.005)
oil_rent			0.009**	0.010***
			(0.004)	(0.003)
aging				0.000
				(0.000)
cons	2.613***	2.354***	2.672**	2.707***
	(0.368)	(0.349)	(1.224)	(0.876)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1> 선거제도: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86***	0.703***	0.697***	0.670***
	(0.058)	(0.053)	(0.108)	(0.108)
smd_ge	0.285**	0.182*	0.214	0.235
	(0.116)	(0.110)	(0.153)	(0.160)
mmd_ge	0.183	0.067	0.122	0.147
	(0.126)	(0.116)	(0.169)	(0.175)
esp_colony	-0.102	-0.096	-0.106	-0.103
	(0.082)	(0.071)	(0.113)	(0.108)
former_ussr	-0.223***	-0.249***	-0.205*	-0.224**
	(0.053)	(0.084)	(0.109)	(0.102)
legor_sc	0.155***	0.169***	0.135**	0.129**
	(0.054)	(0.054)	(0.060)	(0.057)
trd	0.003***	0.004***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inflat		-0.005***	-0.008**	-0.008***
		(0.001)	(0.003)	(0.003)
lnfdiin			0.002	0.002
			(0.005)	(0.005)
oil_rent			0.008**	0.009**
			(0.004)	(0.004)
aging				0.000
				(0.001)
cons	2.762***	2.691***	2.749**	2.976***
	(0.690)	(0.579)	(1.197)	(1.132)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2> 선거제도: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77***	0.696***	0.673***	0.641***
	(0.058)	(0.054)	(0.101)	(0.098)
smd_cc	0.214***	0.161**	0.185**	0.203**
	(0.082)	(0.079)	(0.087)	(0.094)
mmd_cc	0.107	0.039	0.083	0.108
	(0.080)	(0.080)	(0.105)	(0.110)
esp_colony	-0.122*	-0.101	-0.131	-0.132
	(0.070)	(0.063)	(0.093)	(0.085)
former_ussr	-0.202***	-0.236***	-0.200*	-0.219**
	(0.064)	(0.085)	(0.107)	(0.098)
legor_sc	0.164***	0.179***	0.140**	0.131**
	(0.050)	(0.055)	(0.057)	(0.055)
trd	0.003***	0.004***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inflat		-0.005***	-0.008***	-0.008***
		(0.001)	(0.003)	(0.002)
lnfdiin			0.001	0.001
			(0.005)	(0.005)
oil_rent			0.011**	0.012**
			(0.005)	(0.006)
aging				0.000
				(0.001)
cons	2.975***	2.808***	3.051***	3.332***
	(0.644)	(0.577)	(1.077)	(0.993)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3> 선거제도: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09***	0.719***	0.695***	0.682***
	(0.059)	(0.062)	(0.094)	(0.100)
smd_ps	0.093**	0.054	0.059	0.058
	(0.044)	(0.035)	(0.051)	(0.048)
mmd_ps	-0.005	-0.061	-0.027	-0.031
	(0.051)	(0.038)	(0.050)	(0.048)
esp_colony	-0.144***	-0.138***	-0.163**	-0.160**
	(0.050)	(0.045)	(0.080)	(0.074)
former_ussr	-0.202**	-0.226**	-0.205*	-0.225**
	(0.086)	(0.099)	(0.106)	(0.096)
legor_sc	0.168***	0.173***	0.142***	0.143***
	(0.048)	(0.051)	(0.052)	(0.051)
trd	0.003**	0.003***	0.003*	0.003**
	(0.001)	(0.001)	(0.002)	(0.001)
inflat		-0.005***	-0.009***	-0.008***
		(0.002)	(0.003)	(0.002)
lnfdiin			0.002	0.002
			(0.005)	(0.005)
oil_rent			0.010**	0.010**
			(0.004)	(0.005)
aging				0.000
				(0.000)
cons	2.813***	2.732***	3.018***	3.118***
	(0.592)	(0.605)	(0.962)	(0.991)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4> 선거제도: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08***	0.714***	0.709***	0.718***
	(0.047)	(0.049)	(0.074)	(0.083)
smd_reg	0.039***	0.024	0.032*	0.028
	(0.014)	(0.016)	(0.018)	(0.017)
mmd_reg	0.027*	0.008	0.027	0.019
	(0.015)	(0.018)	(0.022)	(0.021)
esp_colony	-0.152***	-0.120**	-0.174***	-0.160**
	(0.043)	(0.047)	(0.067)	(0.076)
former_ussr	-0.205***	-0.241***	-0.128*	-0.159**
	(0.056)	(0.080)	(0.066)	(0.074)
legor_sc	0.141***	0.157***	0.091**	0.097**
	(0.053)	(0.056)	(0.041)	(0.042)
trd	0.003***	0.004***	0.002*	0.002*
	(0.000)	(0.001)	(0.001)	(0.001)
inflat		-0.005***	-0.010***	-0.008**
		(0.001)	(0.003)	(0.003)
lnfdiin			0.003	0.003
			(0.005)	(0.005)
oil_rent			0.007	0.008
			(0.007)	(0.006)
aging				0.000
				(0.000)
cons	2.649***	2.636***	2.792***	2.688***
	(0.503)	(0.509)	(0.769)	(0.892)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5> 선거제도: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673***	0.690***	0.699***	0.697***
	(0.050)	(0.046)	(0.100)	(0.095)
smd_leg	0.056***	0.042**	0.038	0.039*
	(0.018)	(0.019)	(0.025)	(0.022)
mmd_leg	0.043**	0.025	0.026	0.026
	(0.018)	(0.021)	(0.033)	(0.026)
esp_colony	-0.103**	-0.083	-0.097	-0.091
	(0.050)	(0.054)	(0.081)	(0.081)
former_ussr	-0.210***	-0.252***	-0.164	-0.196**
	(0.059)	(0.069)	(0.105)	(0.089)
legor_sc	0.111*	0.138**	0.108	0.104*
	(0.057)	(0.066)	(0.071)	(0.055)
trd	0.003***	0.004***	0.003	0.003**
	(0.001)	(0.001)	(0.002)	(0.001)
inflat		-0.005***	-0.009	-0.008*
		(0.001)	(0.006)	(0.004)
lnfdiin			0.001	0.001
			(0.005)	(0.005)
oil_rent			0.008	0.008*
			(0.005)	(0.005)
aging				0.000
				(0.000)
cons	2.862***	2.742***	2.760***	2.736***
	(0.493)	(0.449)	(1.049)	(0.983)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6> 권력분립: 정부 효과성(ge)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1***	0.753***	0.738***	0.686***
	(0.038)	(0.035)	(0.105)	(0.091)
sep_ge	0.345***	0.273***	0.300**	0.335**
	(0.104)	(0.102)	(0.136)	(0.144)
fus_ge	0.179*	0.089	0.138	0.155
	(0.101)	(0.090)	(0.151)	(0.160)
esp_colony	-0.268***	-0.274***	-0.278**	-0.303**
	(0.066)	(0.056)	(0.122)	(0.120)
former_ussr	-0.222***	-0.240***	-0.223**	-0.236**
	(0.047)	(0.071)	(0.095)	(0.103)
legor_sc	0.054	0.057	0.036	0.049
	(0.036)	(0.036)	(0.046)	(0.051)
trd	0.003***	0.004***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inflat		-0.004***	-0.007**	-0.008***
		(0.001)	(0.003)	(0.003)
lnfdiin			0.003	0.004
			(0.005)	(0.005)
oil_rent			0.008**	0.009***
			(0.004)	(0.003)
aging				0.001
				(0.000)
cons	2.402***	2.258***	2.389**	2.880***
	(0.434)	(0.387)	(1.164)	(1.022)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7> 권력분립: 부패통제(cc)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6***	0.760***	0.699***	0.669***
	(0.044)	(0.036)	(0.121)	(0.094)
sep_cc	0.225**	0.199**	0.226**	0.248**
	(0.100)	(0.080)	(0.105)	(0.105)
fus_cc	0.097	0.043	0.113	0.120
	(0.083)	(0.070)	(0.129)	(0.122)
esp_colony	-0.244***	-0.247***	-0.276***	-0.289***
	(0.084)	(0.062)	(0.107)	(0.108)
former_ussr	-0.207***	-0.232***	-0.175*	-0.191*
	(0.057)	(0.074)	(0.102)	(0.104)
legor_sc	0.054	0.058	0.036	0.041
	(0.039)	(0.038)	(0.040)	(0.042)
trd	0.003***	0.003***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inflat		-0.004***	-0.009**	-0.009**
		(0.001)	(0.004)	(0.004)
lnfdiin			0.004	0.004
			(0.006)	(0.006)
oil_rent			0.013	0.014*
			(0.008)	(0.007)
aging				0.000
				(0.000)
cons	2.479***	2.267***	2.936**	3.196***
	(0.509)	(0.391)	(1.283)	(1.002)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8> 권력분립: 정치 안정성(ps)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6***	0.755***	0.733***	0.702***
	(0.058)	(0.049)	(0.084)	(0.077)
sep_ps	0.095*	0.076*	0.071	0.081*
	(0.051)	(0.046)	(0.045)	(0.044)
fus_ps	-0.033	-0.072	-0.069	-0.086
	(0.060)	(0.047)	(0.073)	(0.060)
esp_colony	-0.268***	-0.266***	-0.301***	-0.310***
	(0.101)	(0.068)	(0.082)	(0.074)
former_ussr	-0.201**	-0.212***	-0.204**	-0.216**
	(0.081)	(0.082)	(0.104)	(0.096)
legor_sc	0.087**	0.082**	0.074	0.091*
	(0.041)	(0.040)	(0.048)	(0.053)
trd	0.003***	0.003***	0.003*	0.003**
	(0.001)	(0.001)	(0.002)	(0.001)
inflat		-0.004***	-0.008**	-0.007***
		(0.002)	(0.003)	(0.002)
lnfdiin			0.003	0.003
			(0.006)	(0.005)
oil_rent			0.008	0.009*
			(0.005)	(0.005)
aging				0.001
				(0.001)
cons	2.651***	2.495***	2.741***	3.034***
	(0.637)	(0.506)	(0.902)	(0.783)
observations	950	950	793	793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19> 권력분립: 규제품질(r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31***	0.750***	0.704***	0.710***
	(0.035)	(0.034)	(0.072)	(0.071)
sep_reg	0.051***	0.041***	0.045***	0.046***
	(0.010)	(0.010)	(0.013)	(0.012)
fus_reg	0.027**	0.011	0.030*	0.028**
	(0.012)	(0.013)	(0.016)	(0.014)
esp_colony	-0.306***	-0.313***	-0.283***	-0.286***
	(0.051)	(0.054)	(0.066)	(0.066)
former_ussr	-0.212***	-0.244***	-0.146**	-0.167**
	(0.045)	(0.060)	(0.070)	(0.077)
legor_sc	0.075*	0.070*	0.061*	0.055
	(0.039)	(0.038)	(0.035)	(0.036)
trd	0.003***	0.003***	0.001*	0.002*
	(0.000)	(0.001)	(0.001)	(0.001)
inflat		-0.005***	-0.010***	-0.009***
		(0.001)	(0.003)	(0.003)
lnfdiin			0.003	0.004
			(0.005)	(0.005)
oil_rent			0.008	0.008*
			(0.006)	(0.005)
aging				0.000
				(0.000)
cons	2.460***	2.332***	2.851***	2.766***
	(0.373)	(0.360)	(0.737)	(0.750)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부표 20> 권력분립: 법치주의(leg) 분석 결과

종속변수: gdp	(1)	(2)	(3)	(4)
L.gdp	0.706***	0.736***	0.711***	0.704***
	(0.039)	(0.037)	(0.114)	(0.085)
sep_leg	0.064***	0.057***	0.053***	0.057***
	(0.016)	(0.015)	(0.020)	(0.019)
fus_leg	0.040**	0.027*	0.032	0.034*
	(0.016)	(0.016)	(0.024)	(0.019)
esp_colony	-0.242***	-0.247***	-0.226***	-0.229***
	(0.062)	(0.056)	(0.077)	(0.074)
former_ussr	-0.214***	-0.247***	-0.156*	-0.183*
	(0.044)	(0.050)	(0.092)	(0.094)
legor_sc	0.037	0.042	0.030	0.025
	(0.039)	(0.042)	(0.032)	(0.037)
trd	0.003***	0.004***	0.002	0.002*
	(0.000)	(0.000)	(0.002)	(0.001)
inflat		-0.005***	-0.010*	-0.009**
		(0.001)	(0.005)	(0.004)
lnfdiin			0.002	0.002
			(0.005)	(0.005)
oil_rent			0.009***	0.010***
			(0.004)	(0.003)
aging				0.000
				(0.000)
cons	2.615***	2.352***	2.702**	2.706***
	(0.381)	(0.352)	(1.190)	(0.921)
observations	912	912	790	790

주: 1)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임. ***는 p<0.01, **는 p<0.05, *는 p<0.1.
2) 분석대상 연도 및 국가 수는 체제 분석(부표 1~5)과 동일함.

자료: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접속일: 2025. 4. 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접속일: 2025. 4. 24);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접속일: 2025. 4. 24);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접속일: 2025. 4. 29); UN trade & development(접속일: 2025. 6. 4).

■ ABSTRACT

Government Forms and Economic Security

Jaehoon Kim

This repor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forms and economic security, analyzing how political systems in democratic countries influence economic development.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dichotomous comparisons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this research empirically identifies the conditional effects of micro-institutional combinations in OECD high-income democracies—such as government type, electoral rules, and power structures—on long-term economic levels through government capacity. It emphasizes that beyond the polar extreme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the Beijing Consensus, the economic conversion efficiency of government capacity within democratic institutions is the key determinant.

The literature review examines contrasting views on the impact of democracy on economic growth. Some studies argue that democracy promotes growth by strengthening property rights and investment incentives, while others point out that it can hinder growth due to policy delays and populism. Presidential systems are praised for long-term stability and executive power, whereas parliamentary systems are noted for flexibility and consensus, though empirical results are mixed. Recent analyses, like Acemoglu et al. (2019), confirm positive effects of democracy when using income levels rather than growth rates as the dependent variable, as this captures long-term cumulative effects while controlling for short-term volatility.

For the analytical method, panel data from 38 OECD countries (1995–2023) is utilized with the Arellano-Bover/Blundell-Bond System GMM. The dependent

variable is ln(GDP per capita) to measure economic development levels, with political system dummies (presidential, semi-presidential, parliamentary; single-member district, multi-member district; separation of powers, fusion of power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government capacity indicators (government effectiveness, control of corruption, political stability,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s key explanatory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clude historical legacies (Spanish colony, former USSR, Scandinavian legal origin), economic structures (trade dependence, inflation, FDI, oil rents), and demographic factors (aging) to mitigate endogeneit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presidential system + single-member district + separation of powers yields the greatest increase in income levels from improvements in government capacity. A 1-unit improvement in government effectiveness leads to a 47.1% rise (real 60.2%) in presidential systems (ps), but is nearly insignificant in parliamentary systems (cm). Similar patterns hold for control of corruption and rule of law, with regulatory quality showing 4–7% uplift effects. Political stability is positive in presidential systems but has reverse effects in parliamentary ones. This is interpreted as the fixed terms and separate survival in presidential systems enhancing incentives for long-term reforms, while bottom-up nominations in single-member districts ensure political stability.

Policy implications suggest that for countries like Korea, with vulnerabilities in single-term presidencies and top-down nominations, reforms are needed. Introducing a four-year re-election system to secure long-term vision, midterm elections to turn divided governments into negotiation opportunities, and bottom-up nominations to strengthen legislative independence are recommended.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exclude incumbent politicians and emphasize citizen participation to block agency problems. This forms an "institutional trinity" to complete economic security within democracy, providing a roadmap for the post-Washington-Beijing world.

Research limitations include its restriction to OECD high-income democracies, making generaliz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or authoritarian regimes difficult. The low institutional heterogeneity limits identification of regime effects themselves, and it fails to capture advantages of authoritarian models. However,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optimizing efficiency through fine-tuning in high-institutional environments.

KDI 신간안내

RECENT KDI PUBLICATION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권정현

연구보고서 | 134쪽 | 정가 5,000원

노인돌봄 인력은 노인돌봄서비스의 핵심 자원이다. 본고는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고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에 대한 연구: 앱마켓의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김민정 · 이화령

정책연구시리즈 | 90쪽 | 정가 4,000원

대내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관련한 집행 및 입법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적어도 앱마켓 시장과 같은 주요 시장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앱마켓 관련 시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앱마켓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김도헌

정책연구시리즈 | 132쪽 | 정가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증가하는 노인의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제도의 의료비 대체 효과를 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료비 대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정수환

연구보고서 | 241쪽 | 정가 7,000원

본 보고서는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직업의 노동수요 등 다양한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자체적으로 기업의 산업안전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



윤여창

정책연구시리즈 | 53쪽 | 정가 4,000원

본고는 에너지 산업의 국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장 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진입장벽을 낮추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수평적 지원정책의 효과와 국산화 비율에 따른 조건부 보조금이나 입찰 가점 부여와 같은 수직적 지원정책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약 산업에서의 정부 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



김형진

정책연구시리즈 | 84쪽 | 정가 4,000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혁신 산업인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모태펀드의 혁신 촉진 효과와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벤처투자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특히 정부 투자가 혁신 생태계 전반의 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플랫폼 담합 규율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성익

정책연구시리즈 | 132쪽 | 정가 5,000원

담합은 가장 중요한 경쟁법 집행 대상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담합과 플랫폼 담합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향후 플랫폼 담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가능성과 경쟁 촉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연구시리즈 2026-02

정부형태와 경제안보

인 쇄 2026년 2월 26일
발 행 2026년 2월 28일

저 자 김재훈
발행인 김세직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등 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 화 (044) 550-4114
팩 스 (044) 550-4310

ⓒ 한국개발연구원 2026
ISBN 979-11-7566-104-2

값 4,000원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